

제428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8월18일(월)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외교부 소관
 - 통일부 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재외동포청 소관
-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상정된 안건

-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 외교부 소관
 - 통일부 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재외동포청 소관
-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8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 및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7일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위원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유용원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송언석 위원님이 보임했습니다. 송언석 위원은 오늘 회의에 불참한 관계로 인사말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 사·보임 등에 따른 소위원회 개선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요청 및 여야 간사 위원 간 합의로 소위원회 위원 개선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보임하신 최혁진 위원님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보임하신 김상욱 위원님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송언석 위원님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정애 위원님은 기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홍기원 위원님은 기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변경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소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선임된 세 분 위원님을 비롯한 각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국회사무처 인사 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주연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보임한 직원께서는 앞으로 성심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교부 김진아 2차관께서 제2차 한영 고위급 경제협의회 수석대표 참석을 이유로 일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해 왔고 한국국제교류재단 김기환 이사장께서 제33차 한일포럼 개최식 참석을 이유로 14시에서 15시까지 이석한다는 이석 사유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추가로 위원님 여러분들께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지난 3월 21일에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경주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9월 18일 경주 현장 방문을 다시 한번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일정 수립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현 외교부장관님, 정동영 통일부장관님, 방용승 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처장님, 세 분의 정부부처 기관장분들께서 새로 취임하셨습니다. 각 부처 기관장분들의 인사말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4회계연도 결산 상정 시 정부 측 제안설명과 함께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한 후에 정부 측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의 순서를 거쳐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를 상정한 다음 정부 측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회계연도 결산과 관련된 서면질의는 효율적인 심사자료 작성을 위해서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오늘 전체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여 주시되 내일 오전에 바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 관계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라. 재외동포청 소관

(14시08분)

○위원장 김석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재외동포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 외교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외교부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장관 조현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외교통장관으로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첫 번째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제질서의 대전환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경제안보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어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부는 국민과 미래 세대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실용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변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며 경제안보·통상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초당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주요 외교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교통일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국민의 굳건한 지지를 바탕으로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결산 개요 책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외교부 결산 개관입니다.

외교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등 2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회계연도 총수입액은 7051억 원이고 총지출은 4조 2479억 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액은 3684억 원으로 예산현액 2773억 원보다 911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의 경우 당초 예산액 4조 298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90억 원과 수입 대체 초과지출 승인액 182억 원이 더해져서 예산현액은 4조 569억 원이 되었고 이 중 3조 911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국제개발협력 1조 8938억 원, 재외공관운영 7447억 원, 국제기구 분담금 7071억 원으로 3개 부문이 총지출액의 약 8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주요 예산변동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 외교부는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용역계약 등이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이월액 19억 원이 발생하였고 행사 변경·취소 및 인건비 집행잔액 등 1438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금 및 재무결산 내역 등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다음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동영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통일부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일부장관으로 임명받고 처음으로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일부 본연의 임무인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자이신 국회와 지속적으로 잘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외교통일 분야의 전문가이신 위원님들의 고견도 경청하겠습니다. 지난 6년간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에 평화의 빛을 되찾는 역사적 과업에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4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세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3페이지 결산 개관입니다.

일반회계와 남북협력기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총수입액은 144억 원이고 총지출액은 2306억 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액은 14억을 계상했으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15억 원을 징수 결정했고 이 중 13억 원을 수납했습니다. 오두산통일전망대는 2024년부터 입장료가 무료로 전환돼 보다 많은 국민들이 통일·안보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여했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3221억 원으로 일반예산 2221억 원 그리고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1000억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중 남북협력기금 전출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2221억 원에서 89%인 1987억 원을 집행했고 34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200억 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7페이지 사업별 결산 내역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740억 원, 통일교육 228억 원, 통일정책 136억 원, 정세 분석 106억 원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13페이지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통일정보자료센터 그리고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과정에서 계약 등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액 34억 원이 발생했고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교육훈련비, 북한인권재단 미출범에 따른 출연금 및 인건비 집행잔액 등 200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협력기금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협력기금은 총 7965억 원을 조성해서 사회문화교류지원 등 사업비에 330억 원, 기금운영비 22억 원, 경수로사업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5712억 원을 사용했고 여유자금으로 1901억 원을 운용했습니다.

2024년도 결산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통일부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통일부 소관 세입·세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방용승 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방용승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신임 사무처장 방용승입니다.

부임 이후 처음으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따뜻하게 맞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서 범국민적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 평화통일 정책을 대통령께 자문·건의하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막중한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길에 있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중심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24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결산 개요를 바탕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8쪽의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납액은 700만 원입니다. 구체적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349억 7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97.2%인 339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78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법정위원회, 국내외 지역위원회 등 자문회의 운영과 관련한 7개 사업에 44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년·여성위원 역량 지원, 지역 평화통일준비 역량 강화 등 자문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5개 사업에 25억 2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협의회 운영비 및 공무원 인건비 등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3개의 사업에 121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평화통일포럼, 청소년 평화통일공감사업 등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을 위한 6개 사업에 56억 7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밖에 사무처 공무원 인건비 및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등으로 총 91억 5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24년도 결산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민주평통 업무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상덕 재외동포청장님 나오셔서 재외동포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청장 이상덕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심사는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런 만큼 저와 재외동포청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결산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결산 책자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4년 세입액은 88억 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900만 원을 초과하여 수납되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2023년 재외동포청 출범 당시에 구 재외동포재단의 해산에 따른 보유자금 반납과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출연금 반납 등이 수입으로 계상된 데 따른 것입니다.

1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099억 원이고 이 중 91.6%인 100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인건비 85억 원, 기본경비 51억 원 그리고 사업비 871억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재외동포청 업무 개선에 지침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외교부·재외동포청 소관 결산 및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본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자료 4쪽 ODA 사업 관련입니다.

인도적 지원 사업의 해외긴급구호 예산은 2015년 402억 원에서 2024년 7346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예산의 체계적인 집행을 위한 노력 등의 시정요구에 대한 이행이 미흡한 사례를 지적하였고—5쪽입니다—KOICA 출연금을 교부하지 않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향후 보다 철저한 수요 예측에 기반한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쪽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관련 회의 개최 사업은 외교부와 국방부, 두 부처 간 예산 배분을 기계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인건비 충당을 위한 과다 전용과 정책연구비 전액 미집행의 문제가 발생한바 향후 부처 공동사업 추진 시에는 부처 간 기능별 분담 등 사전에 면밀하게 설계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2쪽입니다.

재외국민 보호사업 중 사건사고 대응인력 심리치료 지원사업은 횡수가 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후속조치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사업 확대 및 사후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쪽 재외공관 현장실습 사업 중 재외공관 현장실습 감독의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에서 2024년 교육생 수 증가에 따른 여비 수요를 예산 편성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재외공관 현장실습 감독에 편성된 예산 일부를 교육생 여비로 세목 조정한바 향후 국립외교원은 재외공관 실습 감독 출장의 정상화를 통해 교육관리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청 소관, 22쪽입니다.

재외동포청은 해외 위난에 처한 재외동포단체의 요청에 따라 발전기 가동에 필요한 물품과 선풍기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일반수용비를 집행하였는데 이는 예산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과목 성격에 맞는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사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통일부 및 민주평통자문회의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사우 전문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통일부 및 민주평통자문회의 소관 결산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주요 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비치된 결산 검토보고 요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먼저 요약 자료 4페이지 통일부 소관 총괄, 예산구조의 불안정성과 정책 일관성 확보 필요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통일정책 추진 관련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북한인권, 남북교류협력, 정착지원 등 주요 사업 예산 항목의 증감폭이 매우 크고 같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연도별 예산 규모와 중점사업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질적으로 연속적인 사업 운영과 축적된 정책 효과의 축소를 초래하고 장기적 관점

에서 통일기반 형성과 국민 신뢰 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부는 향후 정책방향 설정 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한 기획기능 강화, 사업평가 기반 예산 운영, 국회와의 정책협의 활성화 등을 통해 예산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요약자료 8페이지 통일정책추진사업 관련 자문기구 예산의 집행 적정성 제고 필요입니다.

통일부는 내역사업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새로운 통일담론 수립을 위하여 수요포럼 등 다양한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간담회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위원은 참석하지 않고 장관만이 참석하였는바 이를 위원회 사업비로 집행한 것은 해당 사업의 본래 목적인 위원회 정책 자문과 정합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집행 방식에 대하여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유사 사례가 없도록 집행 근거와 사업 간 연계성을 명확히 하고 예산안 편성지침 및 집행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요약자료 마지막 페이지 민주평통자문회의 소관 국내 지역회의 임차료 반복적 과소 편성 및 초과 집행 부적정입니다.

민주평통은 2024회계연도 국내 지역회의 임차료로 19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7670만 원을 집행함으로써 예산 편성액의 약 4배를 초과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지역회의 임차료의 과소 편성 및 과다 집행 사례는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바 향후 국내 지역회의 임차료 예산을 편성할 때 과거 집행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 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반복적인 예산 과소 편성 및 과다 집행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통일부 및 민주평통자문회의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한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할 차례입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14시29분)

○위원장 김석기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먼저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통자문회의 및 재외동포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 외교부장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인사를 드렸으니까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업무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과의 관계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외교정책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8월 25일로 예정된 양국 신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안보·경제동맹에 더해 이제 기술동맹으로 확대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높은 수준의 확장억제 협력 등 확고한 대북 억제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미래지향적 동맹의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한미 관세 합의의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선, 반도체, 원자력 등 전략산업은 물론 경제안보 분야,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3국 협력을 지속하고 대미 외교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다층적인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일 관계입니다.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한일 관계를 보다 견고하고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방일하실 예정이며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 및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틀외교를 포함한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경제, 문화, 미래세대 교류 등 다양한 협력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대응하면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에 11년 만의 시진핑 주석 방한을 통해 한중 정상 교류를 복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한 협력을 포함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국 실용외교의 실질 성과를 거양하고 양국 국민 간 우호정서를 증진시키기 위한 민의 기반을 공고화하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도 견인해 나가는 한편 서해상 일방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업 또 우리 국민의 권익 보호 및 이를 위한 대러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단호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경제외교 역량 강화로 경제안보·통상 도전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구축을 지원하고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 대응체계의 정례화를 추진하여 글로벌 경제안보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사 입장국과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고 핵심광물안보 파트너십 의장국 활동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의 글로벌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발 경제안보 리스크를 적시에 포착하는 한편 재외공관의 수출·수주 외교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는 물론 지자체, 경제단체 등과도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APEC 의장국으로서 올해 경주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이어서 2028년에는 G20 의장국 수임을 추진함으로써 디지털·AI, 기후·환경, 에너지 등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인 의제들을 발굴하고 설정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회의 주최가 방한 관광수요를 견인하고 또 MICE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이 곧 국력이 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첨단기술 확보 그리고 관련 국제규범 수립을 주도하기 위해 과학기술외교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첨단기술을 안보, 경제에 이은 한미동맹의 세 번째 축으로 삼고 이제 한미일 3자, 캐나다, EU 등 기술 선도국들을 대상으로 첨단기술외교 다변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첨단기술산업 성장에 유리한 국제환경이 조성되도록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하도록 첨단기술 국제규범 수립을 주도하겠습니다. 우리 첨단기술산업 분야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고위급에서 한미 간 일치된 대북정책 기조를 확인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하며 북미·남북 대화 재개를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결, 감축,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전략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중·러 등 주변국의 건설적 역할 또한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대화 진전 시에 남북대화와 북미협상을 병행 추진하여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가 상호 추동하여 함께 진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료 6쪽입니다.

재외국민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는 한편 동포사회와의 연대를 한층 강화하는 노력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구체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만 6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여권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김포 한강신도시, 인천 검단구 등 신도시 조성으로 여권발급 수요가 늘어난 지역에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추가 설치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료 7쪽입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당면하고 있는 신종 안보 위협, 기후위기 등 글로벌 과제 해결에 있어서도 전략형 선도국가로서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군사 분야 AI 등 유엔 내 신종 안보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기후협상을 총괄하여 국제규범 정립 및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우리의 전략적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 유럽·인태 지역 유사 입장국 및 중동과의 협력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 인도를 조기 방문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한편 ODA에 대한 전략적 조정을 강화하고 부실사업을 최소화하며 역량 있는 시행기관 중심의 사업을 통해 우리의 ODA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가을 APEC 정상회의 준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경주 APEC 정상회의 주간은 10월 27일 월요일부터 최종고위관리회의,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정상회의 순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정상회의 날짜는 10월 31일 금요일부터 11월 1일 토요일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 부문에는 에이백(ABAC), 즉 APEC 기업인자문회의, 최고경영자회의 등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초청장은 20개 회원 정상 모두에게 전달되었으며 대부분의 회원들은 최고위급 참석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중국 등 주요 회원 정상의 참석을 위해 대통령께서도 다양한 계기에 APEC 회원 정상을 직접 초청하셨고 저 또한 미국·중국 외교장관 등에게 직접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한 지지 및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정상회의 결과 문서로는 APEC 주요 성과를 집약하고 정상 차원의 협력 의지를 제시하는 경주선언을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정부의 비전인 회복과 성장에 관련된 메시지를 담은 예정입니다. 아울러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상 간의 합의를 담은 성과 문서도 채택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만찬문화공연, 정상기념촬영, 배우자행사 등이 있으며 현재 세부기획안을 수립하고 조율 중입니다.

정상회의 인프라는 9월 중순 완공을 목표로 관련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정상용 숙소는 대부분 8월 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김해·대구 공항 등 총 5개소의 공항 귀빈실 개보수 작업 그리고 행사장 주변 및 경주 인근의 도로 야간경관 개선 작업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APEC 정상회의 홍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제고를 위해 온라인 국민소통 채널 개설, CNN 등 국내외 광고 송출, 공식주제 영상 제작 등 다방면에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동영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당면해서 통일부가 추진해 나갈 주요 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 동향입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창당 80년, 9차 당대회라는 양대 정치행사 준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초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를 획기적 이정표로 설정한 만큼 새로운 정책 노선을 제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 상황은 산업생산, 대외교역, 식량상황 등에서 일정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

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환율과 물가는 최근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시범 개장하였으며 러시아와 외교 이벤트를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하면서 러시아 관광객을 계속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상황은 지난해 극단적인 적대와 대결 상황에서 벗어나 긴장완화 흐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다만 북한이 김여정 담화를 통해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한미 모두에게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과의 대화 복원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립니다.

통일부는 대내외의 복잡한 정세 변화 속에서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다시 세우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다섯 가지 핵심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첫째,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입니다.

북한과의 대화채널 복원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주요 계기를 활용해서 북한에 전략적 메시지를 발신하고 회담 역량을 강화해 대화 재개에도 대비하겠습니다. 신뢰회복 조치로 전단·확성기 중단 등 적대적·대결적 행위를 청산했습니다. 철저히 상황을 관리하면서 단계적으로 군 통신과 9·19 군사합의 복원 등 군사적 신뢰를 쌓아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3쪽입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전안 그리고 한반도평화통일기본법 제정 등 내부적으로 대북정책 추진의 기반을 제도화하는 한편 평화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남북기본협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입니다.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인도적 협력 통로부터 복원하겠습니다. 민간 차원의 인도주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어린이 지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야별 협력을 준비하겠습니다.

통일부는 최근 민간 차원의 접촉을 최대한 허용하기 위해서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폐지했습니다. 이처럼 남북교류협력법은 그 본래 취지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국제행사를 통해서 민간교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겨레말큰사전 등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통해서 교류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셋째,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입니다.

이산가족 및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등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 해결이 시급합니다. 북한과 인도적 대화 재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체계적 지원 계속하겠습니다. 특히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서 거주지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북한 취약계층의 권리를 증진하고 인권 기술협력 등 북한과의 협력사항을 찾아 나감으로써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입니다.

지속가능한 대북·통일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해서 국민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민간 주도로 다양한 평화·통일운동의 장을 마련하고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국제 통일대화 등을 통해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평화와 통일, 민주 시민교육을 포괄하는 교육을 통해서 분단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국립통일교육원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담기관으로 개편해서 교육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북한자료 공개를 추진하는 한편 2027년 개관하는 국립평화통일자료원을 균형 잡힌 대북관, 평화적 통일관을 함양하는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경제 공동성장 미래 준비입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을 수립해서 남북 공동성장 그리고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평화경제특구를 통해 접경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평화뿐만 아니라 생태적으로도 큰 가치를 가진 DMZ는 한반도 평화관광의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일부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 계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통일부 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용승 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처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방용승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민주평통사무처장 방용승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를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민주평통의 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제22기 자문회의 구성 및 출범입니다.

2023년 9월 1일에 임기를 시작한 제21기는 이번 달인 8월 31일 2년간의 임기를 종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22기 구성 및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22기 자문위원 위촉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보고드리는 내용은 위촉계획안임을 말씀드립니다.

평화통일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국내외 인사를 위촉할 계획이며 특히 지역·성별·세대 균형 및 대표성 확보, 신진인사 발굴 및 청년 공모제 추진, 차세대 재외동포 및 글로벌 인재 발굴을 중점 사항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성이 완료된 후에는 전체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국내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해외에서는 45개 해외 협의회 단위로 출범행사를 개최하여 새롭게 위촉된 자문위원들과 활동방향 및 추진 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자료 2쪽 법정위원회 운영 및 정책건의입니다.

운영규정 제·개정 등 민주평통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는 연 4회

개최되며 2월과 7월 두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제22기 상임위원회는 구성이 완료된 뒤 12월에 전체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원들로 구성된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안보환경 대격변기 통일 공감대 확산 방안, 대내외 환경 변화와 통일·대북정책 쇄신 방향,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대주제로 1~3분기에 개최하였고 4분기는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분과위원회 논의 등을 토대로 수렴된 의견은 분기별로 정책 건의하였으며 주요 현안 관련 대응 방향 등을 위한 수시 건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평화통일 여론수렴 다양화를 위한 통일여론조사를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0월에는 청년층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묻는 수시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문위원의 직능별 전문성을 기반으로 분야별 의견수렴을 위한 직능별 정책회의를 네 차례 추진하였습니다. 1~3차는 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과 과제를, 4차는 지속가능한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분야별 과제를 주제로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계의 남북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를 9월과 12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지역협의체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를 통하여 협의회 활동을 공유하고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 국민소통과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입니다.

지역 평화통일 플랫폼 역할 수행을 위한 평화통일포럼을 12회 개최하였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정책과 현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민교실도 지역협의회 단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지자체, 시민사회와 함께 공론의 장을 형성하여 지역 고유의 평화통일 과제를 발굴하고 실천하는 평화통일시민대화를 전남 목포와 강원 강릉에서 두 차례 개최하였고 하반기에 수도권에서 한 차례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역별 공감대,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맞춤형 통일특화사업도 지역주민 참여형, 지역별 대표 브랜드사업 등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통일관, 역사관 함양을 위한 청소년 통일공감사업인 통일퀴즈 원정대를 중·고등학교와 함께 추진했으며 지난 7월에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내외 청소년 140여 명과 함께 연천 통일미래센터에서 통일골든벨 결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사업을 추진하여 멘토-멘티 859쌍이 맞춤형 멘토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 5쪽 자문위원 평화통일 역량 강화입니다.

제22기 출범 후에 부의장·협의회장 및 간사를 대상으로 하는 간부자문위원 워크숍과 18개 지역회의 단위 자문위원 연수를 통해서 자문위원의 평화통일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여성 자문위원의 통일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장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청년·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평화통일 활동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세계 청년·여성 컨퍼런스를 제22기 출범 후 각각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반도 정세 그리고 남북관계 등 다양한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평화

통일 콘텐츠 제작 및 지원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료 6쪽 해외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입니다.

해외 평화통일 정책강연회는 자문위원과 해외 동포뿐 아니라 현지 주류 인사를 초청하여 지난 4월 뉴욕과 토론토에서 각각 개최하였으며 아울러 평화통일포럼은 광복 80주년, 한미동맹 72주년, 한일 수교 60주년 등 주요 계기를 고려하여 3월 일본, 4월 미국에서 개최하였으며 오는 8월 27일 인도 델리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민족 통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글로벌 전략 특별위원회 컨퍼런스를 4월 일본에서 개최하였으며 제22기 특위 워크숍을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K-컬처와 연계한 평화통일 공감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특화사업으로 국제 사회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방용승 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상덕 재외동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청장 이상덕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외동포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쪽 재외동포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새 정부의 동포정책 기조에 부응해서 동포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통합과 성장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이를 위해서 두 가지로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는 국격에 걸맞은 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을 실현하는 것, 둘째는 동포 역량 극대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의 세 가지 핵심은 동포사회 핵심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동포 역량 극대화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한편으로 약자와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제2쪽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국격에 걸맞은 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입니다.

차세대 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을 위해서 전 세계 약 1400개 한글학교의 역량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사회의 핵심 민원인 복수국적 제도의 유연화와 재외선거 참정권 보장 확대를 위해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원폭 피해 동포를 비롯해서 고려인, 사할린, 파독, 입양 동포 등 우리 역사 속에서 재외동포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이분들의 치유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쪽입니다.

재외동포청의 주된 수요자인 재외동포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범부처 통합민원실을 통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외동포인 증센터 운영을 확대해서 국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거주지역의 정책 수요와 여건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서 미국 신정부의 이민정책 대응 등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적극 수립·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동포 역량 극대화를 통한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동포사회에 대한 일반적 지원을 넘어서 동포사회와 모국이 함께 동반 성장하는 상생형 정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우선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재외동포 민간외교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약 100만 동포에 대한 정착 지원을 체계화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재외동포청 내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습니다.

제4쪽입니다.

해외 동포 청년인재를 적극적으로 국내에 유치하여 사회 적응과 취업 연계 등 국내 정착 전반을 지원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의 인적 자산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과 동포 기업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한상경제권 구축을 완성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9월 중에 세계한인정치인포럼, 10월 세계한인회장대회 등 지역별·세대별·분야별 대표가 참여하는 연례 행사를 개최합니다. 또한 재외동포와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소통 거점으로서 가칭 ‘재외동포TV’를 신설해서 본국과 동포사회 간 그리고 각 지역 동포사회 간 결속과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외동포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이상덕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현안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예, 하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자료제출 요구를 포함해서 외교부장관에게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촉구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순직해병특검이 조태열 외교부장관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범인 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합니다. 범인 도피는 형법 제151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 중죄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직권남용하고 범인 도피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 이종섭 전 대사 임명 과정이 수사를 피하기 위한 졸속 임명이다, 그리고 도피를 시키기 위해서 법에 맞지 않는 절차를 진행을 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관련 자료는 지금까지도 제출되고 있지 않

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료제출을 촉구합니다. 이종섭 호주대사 자격심사위원회 회의록, 심사 결과를 비롯한 심사 자료 원문, 당시 자격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및 위원별 날인 시점, 순직해병특검팀의 공문 등을 통해 제출한 문서 목록 일체를 오늘 중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실의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직접 전화를 해서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게 특검팀의 수사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외교부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다라는 문제고, 특히 대통령실이 주도했다면 외교부로서는 그 의혹을 확실하게 푸는 게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유창호 전 부대변인의 경우에도 지난번에 중징계로 외교부에서 건의를 했지만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경징계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아마 이의제기를 했다고 알고 있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본인의 주장으로는 ‘장관과 상관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대통령실에 있는 해외언론비서관이 지시를 해서 형법상 내란죄를 선전한 혐의가 대통령실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다면 지난번 검찰의 수사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수사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도 명백하게 밝혀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외교부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력하게 촉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외교부장관께서는 김영배 간사가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법령에 근거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이재강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석기 예, 말씀하십시오.

○이재강 위원 제가 주캄보디아대사관에서 캄보디아개발위원회와 진행했던 투자협력정책회의의 회의록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5일 회의에서 다뤄진 안건 중에 EDCF 사업 하도급 계약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의 내용을 요청했습니다.

유상 ODA가 기재부 소관이라고 하지만 현지 대사관은 각 부처가 집행하는 ODA 사업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모니터링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EDCF 전대차관 사업 역시 대사관이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한 자료가 여전히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우리 부처 관계자와 상대국 차관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규모의 회의를 하면 통상 회의 전후로 해서 외교부 본부에 오고 가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당일 회의록은 이미 작성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그 문서만 먼저 보내 달라고 해도 아직 답이 없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회의록을 포함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강 위원님의 자료제출에 대해서 외교부는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현안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에서는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주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간사 간 협의로 5분으로 하며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원 위원** 평택갑 출신 홍기원입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8월 23일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바로 워싱턴으로 이동해서 25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과 정상회담도 중요한데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이지 않습니까? 한미 정상회담 하기 직전에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홍기원 위원** 대통령께서는 8월 15일 경축사에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 하셨고 또 일본에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사 문제에서 원칙을 유지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방향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런데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 우리가 기대하는 일본의 노력, 호응이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광복절 당일 날 일본의 주요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거나 또 공물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같은 날 독도에 해양순시선을 보내서 영유권 주장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세요?

○**외교부장관 조현** 과거사 문제는 원칙을 가지고 또 꾸준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과거사 문제에만 집착을 했을 경우에 한일관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가져와졌고 또 이것을 좀 무시하면 그것대로 부정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 입장을 가지고 인내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토 문제는 조금 다른 이슈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약간의 어떤 행동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즉각 대응을 하기보다는 독도는 우리의 고유 영토이고 이것이 국제법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확고하게 주장하면서 오히려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정공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기원 위원** 우리가 원칙을 지킨다, 그렇지만 인내한다 이런 입장인데 그것을 일본이 잘못 받아들이거나 해석해서 일본이 무엇을 하든 우리가 참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비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리고 이번에 25일 날 이재명 정부 출범 첫 번째이자 트럼프 2기 최초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트럼프가 다른 나라들과 한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또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 또 국제 정세도 북

잡다단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들 관측합니다. 한미관계 설정에 또 매우 중요한 정상회담이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정부는 어떤 마음 자세로 임할 계획입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미국과 여러 미국의 우방국들이 정상회담을 한 것을 저희가 잘 지켜보았고 이와는 별도로 우리는 또 한미관계를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 분명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도 우리의 그런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또 무엇보다도 미국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제시함으로써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기원 위원 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홍기원 위원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킨다고 했는데, 동맹 현대화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고 또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방비 증액도 요구할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주한미군 분담금도 10억 달러 이상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대응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우선 제일 중요한 확장억제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또 현대화는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 특히 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새로운 전쟁의 양상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시급하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될 분야입니다. 따라서 그런 계기로 삼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기원 위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외교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시험대가 되는 정상회담이 될 것 같은데요. 장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뜻을 잘 새기서 가지고 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요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요한 위원 여기 외교통일에서 가장 매력 있게 느끼는 것은 여야가 없고 우리가 이제 미국을 상대해야 되고 또 남북관계가 있고 또 전 세계를 상대해야 되는 데에서 매력을 느낍니다. 그러나 정책에서 간단하게 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늘리는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우리한테 자금을 많이 말리는, 흡수해 가는 전략으로 보여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지금 협상보다는 견적서를 보내거나 청구서를 보내는 이런 모양새가, 트럼프 정부가 하는 행동이 그렇게 보여요.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그런데 제가 지

금 잠깐 보좌관님들 통해서 계산을 해 봤는데 우리한테 요구하는 500조의 투자가, 일본에는 760조인데요 이것을 개인당 나누면 일본 사람은 1인당 600만 원입니다. 우리는 1인당 940만 원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매우 불쾌하고 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 염려가 많이 됩니다, 또 얼마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를 압박할 건지.

지금 말씀드린 것,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산다고 하지만 거의 더블이 조금 안 되는 960만 원 대 600만 원, 1인당 부담이 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이 어떠시고 전략이 어떤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일본과 우리나라가 각각 미국과 협의하고 또 합의해 나갈 내용은 유사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숫자가 그렇게 나옵니다마는 앞으로 그 내용을 어떻게 채워 나가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우리가 많은 것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조선 협력 같은 것은 우리가 미국의 낙후된 조선을 새로 만들어서 윈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시고 지난번 울산에 가서 현장에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요한 위원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민대학교 란코브 교수가 그렇게 발언한 것으로 들었는데, 핵무기 포기하는 것은 북쪽에서 마치 ‘내가 당신한테 몇억 원을 주겠다. 10억 원을 주겠다, 자살해라’ 이런 발언하고 같다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아주 재미난 표현이에요. 그 정도로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게 저는 현실로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관님은?

○외교부장관 조현 이게 개인의 결정이라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나 사회도 어떠한 개인의 일로만 볼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핵무기가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가 미국과 함께, 특히 트럼프 리더십이 있으니까, 좀 독특한 리더십이 있으니까 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요한 위원 통일부장관님께 똑같은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인도적인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6년 전, 2019년 2월 28일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제안을, 그 카드를 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 핵 문제의 지형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아까 비유하신 그런 입장일지 모르지만 또 상황이 변하면 조현 장관 말씀처럼 핵이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도주의 협력은 지금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부터 시작할 생각입니다.

○인요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웅 위원 통일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남 확성기 철거 문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7일·8일 날 국방부에서 ‘증설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다가 9일 날 갑자기 오전에 ‘철거 동향이 있다’ 이렇게 하고 9일 날 통일부에서 ‘북한이 신속하게 철거에 나섰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어요. 그러더니 11일 날 국방부에서 ‘원래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약간 말을 뺐고 12일 날 대통령께서 ‘북한이 확성기 일부를 철거하고 있다’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셨고요 14일 날 김여정이 ‘우리는 철거한 적도 없고 철거할 의향도 없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지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현재 장관님께서 대남 확성기 철거인지 증설인지에 대해서 보고받고 있는, 알고 계신 현황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확성기 관련해서는 김기웅 위원님이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8월 9일 날 오전에—토요일입니다—북쪽 지역……

○**김기웅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상황 요약해서. 철거가 됐다, 증설이 됐다, 아무것도 아니다, 어느 쪽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발표된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2대를 철거했다가 1대를 다시 원위치시켜서 1대만 철거한 상황입니다.

○**김기웅 위원** 자료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제가 14일 날 합참으로부터 받은 자료인데요. 14일 현재 시점에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증설을 했는지 철거를 했는지 얘기를 해 달라 했더니 철거 얘기는 없고요 ‘40여 개소에 설치돼 있고 일부 지역에서 증설하였습니다’라고 답변서가 왔습니다. 이게 합참의 답변서거든요. 그러니까 증설했다는 게 현재 맞는 거지요, 이게 잘못된 답변서가 아니라면.

이것 말고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확성기 사진.

이게 북측 확성기인데요. 저게 여섯 줄에 4개·3개가 있고 18개가 있다가 24개도 있는데 저것 중에, 저게 마흔 곳에 저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1개를, 저 중에 1개·2개를 고장 날 수도 있고 하니까 떼다가 고쳐서 붙이고 하는 작업을 늘 루틴하게 해 오는데 9일 날 저것 2개 떼다가 오후에 하나를 붙이고 하나는 아직 떼어 상태인데 저것 하나 떨어진 걸 보고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라고 판단한 근거가 뭐지요? 저 스피커 하나 빠진 게 확성기 철거라고 봤다는 건데, ‘신속하게 철거에 나섰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지지대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24개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24개 중에 늘 떼다 붙였다 하는데 그중에 2개 빠졌다가 하나 붙였는데 ‘철거에 나섰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는 그 합당한 판단 근거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근거가 있으신가 여쭙보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합참의 발표 이외의 것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면 다음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북측에서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했고 김여정은 ‘철거한 적도 없고 할 의향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누군가 한 사람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지. 김여정이 거짓말을 했든지 뭐 이런 건데, 만약에 지금 장관님께서 김여정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누가 지금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대통령 말씀의 뒷부분을 지금 마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 북측도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뒷부분 얘기입니다.

○**김기웅 위원** ‘철거하고 있다고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합참의 보고를 받은 겁니다.

○**김기웅 위원** 글썄, 그 얘기가 합참 보고를 받으신 거지요. 그러면 김여정 얘기가, 김여정이 거짓말한다는 건가요? 하다가 안 했다는 건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이것은 참말,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고요. 확성기는 사실 박물관에 있어야 할 유물입니다. 2차 대전 끝나고 다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여정 말이 일단 거짓이라고 해 보지요. 원래는 자기들도 호응하려고 했는데 남측에서 호응한다고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안 한다라고 하는 거짓말이라고 치면 우리가 너무 선불리 북한이 오전에 하나 치우자마자 호응한다고 외치는 성급함 내지는 좀 가벼운 행동·언행 때문에 사실 큰일을 그르쳤다고 볼 수도 있고요. 만일 김여정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아주 개들 루틴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춤추고 뽕파리 치고 하다가 좀 우스운 꼴이 된 결과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까지도 저런 말씀을 하셨다면, 국민들에게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게 됐다 한다면 누군가가 그런 판단을 하고 보고했을 때는 그 경위도 조사하고 국민께 사과도 하고 책임도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하신 것을 그냥 어찌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위 같은 것 조사하고 이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김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것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민 입장, 정책 수용자 입장에서 보면 확성기가 중단됨으로 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다음은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 울산 남구갑 김상욱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3월 임시 국방안보전략서를 발표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다른 지역의 위협에 대해서는 미군의 직접적 대응을 자제한다.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의 군사행동에 대해 본토 방어나 중국 억제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병력만 제공한다’, 쉽게 말해서 중국 문제가 아니면 미군을 움직이지 않겠다는 취지 같습니다. 동맹국들 방어는 각자 알아서 해라라는 방향으로 미국의 전반적인 군사전략이 바뀌어 가는 것 같고요.

또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데 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그때 한일 관계가 참 발전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좋은 시작이었는데 이후에 일본의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좀 망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시바 총리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준비하는 것이 서로 미래 발전적인 이런 협력관계를 준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고립시키는 데 성공하고 또 캄보디아-태국 분쟁 정리하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재하면서 노벨평화상에 욕심을 낸다 이런 말들도 나

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 김정은과 빨리 만나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트럼프와 푸틴이 가까워지면서 중국이 긴장하고 있고 북한은 푸틴 편에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는 더 밀월 관계가 되고 있고 중국과는 거리를 두고 있고요. 또 북한도 미국과 접촉을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정말 급변한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봐 왔던 한반도 정세와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와 통일부가 유연하게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 장관님께 그런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먼저 정동영 통일부장관님께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적대적 대북정책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북한과 우리나라의 대화가 단절되었는데, 이렇게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이 때문에 우리가 한국 패싱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7월 28일 날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서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쉽게 말해서 적대적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고 또한 북한의 통일전선부가 없어져 버려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통일부가 대화해야 할 상대방 자체가 없어지는, 그래서 북한 말대로라면 통일부가 아니라 외교부가 접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북한과의 최소한의 대화를 통한 신뢰 회복을 지금 빨리 만들지 않으면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전 세계가 한반도를 놓고 지금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북한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는데요. 지금 북한과의 대화 어떻게 열어 가실 계획이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남북관계는 동북아의 지정학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 행사를 전후해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정세가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현재 상태가 비정상입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적대와 대결의 강대강의 대치 속에서 비정상 중에서도 비정상입니다. 최악의 비정상 이것을 정상화로 돌리는 조치, 그것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상화 조치, 안정화 조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일단은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북한에 지금 통일부의 대화 상대할 부서가 자체가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화를 북한의 어느 쪽이랑 연결을 시도할 계획이신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단계적인데요. 일단은 연락 채널 자체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평양에 다녀온 어떤 제3국인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만 통일전선부 간판은 없어졌는데 그 건물 사무실과 사람은 그대로 있더라 하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역시 북도 상황이 바뀌면, 저는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 대화의 파트너로서 남과 북이 마주 앉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욱 위원 북한이 적화통일 노선을 어떻게 보면 체제 경쟁에서 저서 이제는 포기를 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그래서 적대적 2국가론도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은 지금 정권 수호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게
 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사실 북 입장에서 보면 남한 자체, 대한민국 자체가 엄청난 위협
 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대미 관세협상에서 3500억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북한의 1년 GDP 300억 불의 열 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자체가 위협이라
 는 그런 북한의 인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지호 위원** 외교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오늘 보고에서 신흥 첨단기술 분야 중심의 과학기술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여
 쥌겠습니다.

첨단기술 관련해서 사실 AI 관련된 전환이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 과정에 있
 습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나라도 어떻게든 AI 관련된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가 최근 7월 26일 상하이에서 개막한 세계인공지능대회와 AI 글로벌 거버넌스
 고위급 회의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AI 글로벌 거버넌스 행동계획에 대해서 천명을 했습
 니다. 거기에는 인공지능 플러스라는, 산업과 소비 의료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AI를 적
 용을 해서 글로벌 시스템 전체로 업그레이드하겠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 글로벌 사우
 스 국가들에 대해서 AI 발전을 지원하면서 만들어지겠다. 그리고 상하이에 세계 AI 협력
 기구를 설치하겠다. 현재 미국의 민간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끌어 간 전 세계 거버넌스와
 대응점에서 일종의 공공 거버넌스를 강화시키려는 굉장히 큰 노력이 있습니다.

장관님은 중국이 왜 글로벌 어젠다 형성을 통해 AI 거버넌스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싶어하는지, 그것도 공공성을 강화하는지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차지호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이것은 미국이 중국을 기술 분야에서 일종의 컨테인먼트 폴리시
 (containment policy)를 하는 데 대한 중국 나름의 대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지호 위원** 그런데 사실 중국은 전문가 풀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읽
 어 내고 AI로 글로벌 사회 전환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읽어 낼 수 있는 전문가 풀이 평
 장히 두텁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미국과 경쟁구도에서 대응하듯이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사실 이렇게 글로벌 사우스에 AI 전환 과정들을 지원을 하고 특히 공공시스템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것은 중국형 AI 산업과 AI 사회 생태계를 다른 국가들로 확장시
 키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장을 잡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파운데이션 모델로 경쟁을 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유저들이 어떻게 쓰
 는지, 의료 금융 복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쓰고 AI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시장들이 어
 떻게 확대해 나갈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원형에 대한 플랫폼은 어느 국가가 잡을지가 다
 음 AI 전환의 경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기부나 산업부의 영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사실 외교부의 노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외교부는 산업 영역들과 연대돼

서 국제적으로 공공의 시스템을 AI 전환을 어떻게 할지, 글로벌 사우스에서 중국형 생태계를 어떻게 확장할지에 대한 굉장히 심도 깊은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이런 전략이 없습니까? 한국에 이런 전략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라는 공약안을 만드셨고 그 안에 아태 지역의 AI 전환들에 대한 비전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오늘 4페이지에서 AI 이니셔티브 채택이라고 하고 요지라고 했을 때 이걸 굉장히 축소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 비전을 제시하거나 활용 확대를 위한 역량 강화, 민간의 인프라 투자, 이 부분은 다른 나라를 설득하기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어서 다른 나라를 설득할 수 있는 글로벌 어젠다가 형성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외교적 역량을 통해서 중국과 같이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한 다른 여러 지역의 글로벌 사회 시스템 전환 과정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는 어젠다가 아닙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유엔, APEC 등 여러 가지 국제 무대에서 한국이 AI에 관련해서 글로벌 어젠다를 제시할 중요한 무대와 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진 안들은 사실 글로벌 사회 전환들 아니면 시장 전환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안으로 다른 국가들이나 다른 산업 생태계를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공약안에서 만들어졌던 부분대로 AI 기본사회, 그러니까 의료·교육·금융·재난 등 필수 사회 서비스의 AI 전환을 통해서 보편성,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취약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어젠다를 형성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APEC과 유엔과 같은 곳에서 한국이 만들어지는 안들, 한국이 형성한 AI 비전들이 사실 글로벌 어젠다로서 논의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팀들을 강화시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략들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위원님 지적하신 것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번에 APEC 정상회담에서도 저희가 주도하는 AI 문서가 나오고 그것을 20개국에 돌려서 지금 거의 합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한미일 간의 AI 협력 논의도 있어서 이것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밤늦게 인도에서 돌아왔는데 인도도 한국에 AI 협력 요청을 따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잘 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업적 측면만 볼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기업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유엔과도 함께 큰 방향을 잘 보아 가면서 AI 경쟁에서 우리가 결코 뒤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차지호 위원** 콘텐츠에 대해서 저희가 국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또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에 위원 조현 외교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진 두 개를 보실 텐데요. 화면으로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은 올해 5월 달에 잠수 조사 시 배기구에 잠수사가 진입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은 수몰사고 현장이라고 하는 갯도 입구입니다. 이것 보시면 장관님, 저게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현장이라고 하는 것 아마 아실 것입니다.

조세이탄광은…… 표를 잠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2년 2월에 조세이탄광 갯도의 천장이 붕괴돼서 우리 국민 136명 그리고 일본인 47명 등 총 18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991년 1월에 일본에서 조세이탄광의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해인 92년 5월에 우리나라에서 조세이탄광 희생자 대한민국 유족회가 만들어졌습니다. 33년이 지났습니다, 올해로.

수몰사고 이후에 회사 측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갯도를 아예 폐쇄함에 따라서 희생자 유해 발굴 자체가 아예 안 됐고요. 일 측은 진상조사도 실시하지 않았고 한국인 희생자 위패 136인은 우베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이코지에 안치 중입니다, 현재는.

91년 1월부터 시작해서 계속된 일본 시민단체의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지난해 일부 갯도 입구를 확인했고요. 해저 탄광 내부에 전문 잠수부를 투입해서 현재까지 총 다섯 차례 유해 발굴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2024년 10월, 25년 1월, 4월, 6월, 8월 이렇게 다섯 차례에 걸쳐서 전문 잠수부를 보내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갯도 입구까지는 도달했습니다만 본갯도 입구에서도 여전히 유해를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갯도 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이 가능하겠지요.

얼마 전인 8월 12일 날 일본 시민단체에서—조세이탄광의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지요—여기에서 한국 정부에 조세이탄광의 유골 수습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한국인 잠수사 지원 그리고 한인 유족회의 방일 비용을 지원해 달라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장관님, 사실 이것은 한일 양국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시민단체가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한정에 위원 이시바 총리도 최근에 4월 7일 날 있었던 의회 질의에서 조세이탄광 현장조사 관련해서 일본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다고 하는 의향을 표방했지요. 이후에 일본 시민단체 간담회를 가지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이탄광 유골 수습을 한일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실시한다면 이는 어찌 보면 한일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23일, 24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한일 양국 공동으로 조세이탄광 유골 수습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사실 과거사 하면 그냥 한일 양국 정부 간에 결코 협력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되어 왔는데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견 양국 정부가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로 잠깐 봤는데요. 장관께서도 한미 정상회담 또는 어떤 방식이든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한 핵의 평화적 이용 권한을 우리가 확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재고량이 지난해 말 기준해서 1만 9536t에 달하는데 이거는 관련 집계가 시작된 1990년과 비교하면 약 15배로 늘어나 있습니다.

현재 원전 부지 내에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 등 임시저장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 중인데 이게 한계에 부딪혀서 2030년 이후가 되면 정말 저장시설이 가득 차게 되는 상황입니다. 임시방편으로 사용후핵폐기물 저장하기 위한 중간저장시설을 건립하고 있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미 원자력협정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가 평화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에는 좀 열어 놓고 논의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전 폐기물이 저렇게 쌓이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한미가 서로 두 눈을 부릅뜬 가운데 저 핵연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면 독성도 줄이고 용량도 줄이는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정을 재검토하고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사용후핵연료는 산업적인 측면이 있고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런 사용후핵연료를 한미 간에 서로 합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우리 국내에서 이런 잠재적 핵보유국이 돼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설득하고 잠재우고 순수하게 산업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을 강조해서 이미 기합의한 파일로 프로세싱에 대한 10년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해 나갈 것인가, 최선의 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라늄을 어차피 우리가 수입해서 써야 되는데요 연료 비용도 많이 아낄 수가 있고 환경적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자꾸 핵 보유 내지는 핵무장화 이것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한국은 되게 투명하게 핵물질 관련한 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우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축하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감사합니다.

○김영배 위원 중요한 시기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부응하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세종연구소라는 기관이 있는데 외교부가 감독기관이 맞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관련 법에 따라서, 민법이나 아니면 사무규칙 등 관련 법에 따라서 보니까 감독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세종연구소가 보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범죄행위로 좀 보일 수도 있는 의혹도 있는 것 같고.

우선 세종연구소 소장이라는 분이 보니까 이용준이라는 분인데 본인이 진보좌파 세력의 척결이 자기의 임무다, 세종연구소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세종연구소의 목적이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김현욱이라는 소장은 24년 7월 달에 취임했는데 김태호 차장의 연락을 받고 지원했다라고 사석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리고 올해 4월 3일 날 제40차 세종국가전략포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고든 창이라는 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고든 창은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빨갱이다,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SNS에 글을 썼어요. 한번 올려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의 정당은 6월 3일 선거를 훔쳤고 그의 정부는 불법입니다. 그는 한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세종연구소라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초청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외교부는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감사원 감사 의뢰를 해야 할 사안이 있는데요. 지난 3월에 세종연구소에 외교부에서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하는데 뭐냐 하면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8조, 그러니까 국정원의 지침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특수자료를 이전할 경우에는 감독부처의 장에게 보고하고 감독부처의 장은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연구소가 판교 부지를 매각하고 광화문 연합뉴스TV 사옥으로 이전하면서 기존에 있던 각종 자료들을 마음대로 폐기했을 뿐만 아니고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공지까지 냈다고 그래요. 이게 그 안에 국가기밀이 어떻게 포함돼 있는지, 누가 판별해서 버렸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료들이 폐기되었는지 목록 혹시 보고받으신 것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 안에 외교상의 기밀누설에 해당하는 자료가 있다면 이건 형법 98조 위반이고요 간첩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27조에도 어긋납니다. 이런 위법·불법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주의 처분만 하고 어떤 자료들과 어떤 기록물들이 폐기됐는지도 조사하지 않는 외교부가 이게 지금 공무원 조직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필요하면이 아니라 외교부에서 감사를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최근에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했던 삼성바이오 직원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심각한 국익 훼손 행위일 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그랬다면 이것 간첩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수사 대상이에요. 이것은 외교부가 감사하시겠다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판교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법 위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세종연구소가 자구를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2015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성남시하고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몇 년간에 걸쳐서 용역비를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남시장이 바뀌고 나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폐기하고 그 부지를 LIG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3000억에. 한 1만 7000평 이상 되는데 이게 자연녹지로 있는 땅이거든요. 만약에 기존의 계획대로 개발을 해 가지고 팔면 엄청난 액수의 돈입니다. 이 자연녹지를 이렇게 팔기 위해서, 저는 아무리 봐도 공공부지를 짜고 팔아먹은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절차도 보면,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도시계획 절차에…… 제가 구청장 출신 아닙니까. 이것 조금만 해 본 사람이면 ‘아, 이것 굉장히 의도적으로 법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 지금 외교부가 감사뿐만 아니라 수사 의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고받으셨어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것은 보고도 받았지만 이미 시중에 다 알려진 일이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조치를 취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것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외교부장관님,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막중하지요? 취임하자마자 한미 관세협정에도 역할을 해서 이번에 관세협상을 잘 성공적으로 합의하는 데도 기여가 컸다 이

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역할을 많이 하셨지요?

이제 다음 주면 한일·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이용선 위원 특히 한미 정상회담은 드디어 정상 간 최초의 회담을 하게 되는데 이번 회담을 통해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관계를 격상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관세협상의 후속 협의 또 여러 가지 협의들이 아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장, 김건 간사와 사회교대)

○이용선 위원 그런데 특히 군사안보적인 이슈들이 관세·경제 이슈하고 별도로 매우 중요한 의제로 제기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 방위비분담금 문제, 국방비 증액 문제를 아주 중요 의제로 들고 나온다 이렇게 제기돼 있던데, 지난 9일 날 워싱턴 포스트에서 입수해서 보도한 바로는 한미 합의 초기 초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국방비 지출을 GDP의 3.8%로 늘리고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잘 아시지요? 이미 작년에 한미 간에 진지한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했고 우리는 국회 비준까지 마쳤고 또 미국의 바이든 정부도 행정협정이 끝났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협상에 대한 정부 입장이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내용은 일부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약간 과장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협상을 앞두고 흔히 나올 수 있는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용선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난 정부이긴 합니다만 미국 정부하고 진지한 협의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합의한 만큼 이 내용들을 잘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국방비 증액 문제는 대체로 나토, 일본, 한국, 주요 우방에 대해서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나토나 일본에 비해서 한국의 국방비는 2020년 초까지는 대체로 2.78% 정도로 가장 높은…… 세계의 경찰이라는 미국조차도 3.4%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역대 미국 정부가 한국의 국방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트럼프 정부가 갑자기 3.8%를 요구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상호 다른 시작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와 협상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제정세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국방비를 좀 인상하고 국방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과 협력을 해 가지고 특히 R&D 같은 것을 잘 활용한다면 국방비를 늘리는 것이 우리 방위산업에도 좀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선 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지금 일본도 27년까지 2% 목표로 하고 있고 중국도 1.7%밖에 안 되는데 우리의 예산을 과도하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합의하는 것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미군 감축 문제, 성격 변화 문제도 쟁점이 된 것 잘 아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이용선 위원 업무보고에서도 미래지향적 동맹의 현대화,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넘어서서 주한미군의 성격과 관련된 오해를 살 수 있는 압박들이 많이 있는 건 아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위원장대리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아까 조금 전에 김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여정이 말한 ‘허망한 개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결과가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북측도 일부 확정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인 것이 되었습니다. 아까 좀 전에 김기웅 위원님의 자료를 보셨다시피 합참에서는 도리어 ‘북측에서 소형 스피커를 휴전선 일대에 증설하고 있다’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완전히 속은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위 조사를 하고 책임자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행정부의 도리가 아닌가요 싶은데 통일부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확정기, 지난……

○김기현 위원 아니, 그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봅니다. 설명하시지 말고요 이 경위 조사를 하고 문책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문책 사항은 아닙니다.

○김기현 위원 좋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왜냐하면 식별된 것을 보고하는 것은 합참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김기현 위원 근거 없는 짝사랑을 하다 보면 헛물켜기 십상입니다.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은 안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냉철한 현실 인식 없이 자꾸 기대만 부풀고 환상에만 계속 빠져 가지고 실패한 유화정책을 무한 반복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적어도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국민을 속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일부러 속이려고 하셨다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국민을 속인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장관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는 사과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뭘 어떻게 속였다는 거예요, ‘확성기 철거 조짐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철거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사항을 얘기했는데?

○**김기현 위원** 국민을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냉철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외교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이 8월 11일 날 방한했지요? 만났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김기현 위원** 그때 이분하고 만났을 때 장관께서 무슨 얘기 했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고이즈미라는 사람이 일본 언론에 설명을 하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그 인근 8개 현 해산물 수입금지를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는데, 그런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고이즈미……

○**김기현 위원** 요청을 받은 바 있다고 물어봤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하실 것 없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김기현 위원** 요청받은 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것은 양국 간에 신뢰적 조치가 취해져서 양국 간에 신뢰가 쌓인 뒤에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더군다나 당초에 우리 식약처장을 면담하려고 그랬는데……

○**김기현 위원** 됐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장관께서 답변할 사항만 물어보는 것이고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핵폐수라고 하고, 용어를 처리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왜곡이고 조작이다, 핵물질 오염수다, 인류에 대한 범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다들……

○**김기현 위원** 그 표현이 맞다고 동의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그 당시에는 그렇게들 느꼈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 당시에는 느꼈는데, 그러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인정하신다는 뜻입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 후에 처리수를……

○**김기현 위원** 지금 현재 시점에 봐서 그 말이 맞다고 인정하신다는 뜻입니까, 아니라는 뜻입니까? 지금 현재 시점을 물어봤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후에 양국 관계자들이 그것을 검측을 하고 조사를 해서……

○**김기현 위원**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그게 핵오염수, 핵폐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를 물어봅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문제가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위원** 그 객관적 증거자료가 있습니까? 조사를 중국하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 계속 조사한 자료에서 그게 핵폐수라고 하는 근거자료가 나온 게 있습

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IAEA 페이퍼에 의하면 여기에……

○김기현 위원 짐작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자료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아닙니다.

○김기현 위원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십시오.

○외교부장관 조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좋습니다. 자료가 없으시면 거짓말한 게 됩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아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IAEA는 이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일한 가장 합리적인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김기현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동안 계속 실측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군데 지점에 다 꽃고서 수치를 세잖아요. 그 수치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핵오염수, 핵폐기물이라는 증거자료가 나왔는지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객관적 데이터 숫자예요, 숫자, 숫자. 그런 것 없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현 아닙니다.

○김기현 위원 있어요? 있다 그러면 제출하시고 아니라면 거짓말하시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거짓말하지 않았고……

○김기현 위원 그 데이터를 달라니까요.

○외교부장관 조현 IAEA에서 나온 페이퍼와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그림 좀 올리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통일부장관님, 한미 연합훈련이 실제 필요하잖아요. 한미 연합훈련은 필요하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한미동맹이니까요.

○윤후덕 위원 필요한데, 이게 어떤 때는 조정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중단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때에는 유예를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맞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 표를 보면, 이게 통일부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노태우 대통령 때 팀스피리트를 중단했을 때 그 위대한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어 냈어요.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도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 훈련을 중단하면서 만들어 낸 거예요.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때에는 평창올림픽을 만들어 냈지요.

그리고 요즘 장관님이 이것을 어떻게든 조정하자라는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을지훈련이 오늘 시작한 날인데, 조정이 되고 그렇게 됐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윤후덕 위원** 그러면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선제적인 조치가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보냈더라고요. 이것도 장관님이 노력한 것에 따라서 한미 간에 군사적인 협의를 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조정한 거라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제 노력은 아니고요 정부가 충분히 협의해서 조정한 겁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일부장관님도 노력했다 그런 얘가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윤후덕 위원** 그러면 북한이 느끼고 있는 것은 이게 호의적인 시그널이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북은 기본적으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북에 대한 핵 침공 훈련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일부 훈련 내용 중에는, 1년간 한 삼백여 차례 훈련을 했는데요 그중에는 티크 나이프(Teak-Knife)라고 해서 북의 지도부의 목을 따는 훈련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기를 일으키는 게지요. 이런 훈련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느끼는, 또 판단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역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이쪽에서는 이를테면 침략적인 그런 훈련이라고 오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전시에 준하는 대비태세에 돌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제 사실은 침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훈련한 건데, 이게 경제가 완전히 마비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대응을 하면 기동력을 또 유동시키지요, 기동력의 장비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도 없는 처지에 에너지가 다 들어가고, 그래서 경제에 많은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지요. 훈련 때마다 북은 총동원체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뜰이나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 전투기 같으면 또 맞대응을 위해서 전투기가 떠나 하는데 기름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그래서 사실은 북으로 봐서는 굉장히 군사적·경제적 부담이 큰 거지요.

사실 미국의 군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돈만 많이 들고 그리고 훈련을 보니까 지나치게 공격적이다 이렇게 해서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김정은 위원장한테 싱가포르 그리고 판문점에서 두 번 한 일이 있었지요.

○**윤후덕 위원** 북한으로서는 아주 골 아픈 그런 고민이 있는 거라는 것은 분명하네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맞습니다.

○**윤후덕 위원** 외교부장관님, 이번에 8·15 광복절에 우리 대통령께서 일본에 대해서 아주 센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지요? 과거사에 대해서는 별 그렇게 센 얘기는 안 했어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러나 원칙은 분명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이렇게, 이웃하고 같이 쓰는 한마당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의미가 뭐예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러니까 일본에……

○**윤후덕 위원** 조금 더 합시다.

그러면서 일본을 가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상회담 하고 그리고 이어서 미국으로 정상회담을 가잖아요. 이게 어떤 실용적인 뜻이 있는지, 실익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외교부장관 조현 일본을 거쳐서 미국에 가시게 된 것은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실용외교 정책을 분명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일본은 물론이고 한미일 협력에 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저도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미국을 갔었는데 매우 좋은 반응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한미 간의 협의에서 곧바로 어떤 신뢰 단계로 점프해서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미국 측의 실무자 그런 분들도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재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강 위원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은 7월 25일 통일부장관 첫 일정으로 판문점을 방문하셨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이재강 위원 해당 일정 검토 초기에는 장관님 일정에 통일부 출입기자단도 함께 동행하는 것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행하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기자단은 안 갔습니다.

○이재강 위원 유엔사의 반대로 못 간 거지요, 기자들은?

○통일부장관 정동영 글썽요, 신청을 했는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이재강 위원 본 위원이 통일부 관계자와 출입기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처음에는 장관님의 첫 일정에 통일부 출입기자단도 동행하기로 했으나 유엔사에서 기자단 동행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전……

정전협정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정전협정 서문에는 영어로 하면 밀리터리 인 캐릭터(military in character)인데 유엔사와 협의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기자단 판문점 출입은 군사적 성질이라고 볼 수 없는데 혹시 유엔사에 이 문제 제기는 하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재강 위원 또 다음 PPT 한번 보겠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통일부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본 화면은 윤 정부 임기 동안 통일부가 민관에게 요청받은 판문점 방문 협조 내역입니다.

장관님,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유엔사는 2022년 11월 29일까지 기자단 동행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1월부터

기자단 동행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정부 출범 이후로도 장관님의 첫 일정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기자단 출입 불허 기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유엔사는 유홍식 추기경과 일행의 경우 기자단을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기한 촉박을 이유로 불승인했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2023년부터 현재 우리 정부에 이르기까지 유엔사가 판문점에 대한 기자단 방문을 불허한 이유는 2023년 7월 판문점에 견학 갔던 미 육군 병사의 무단 월북 사건과 선후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시점적으로 그렇다는 것일 뿐 현재까지는 해당 자료만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장관님, 미 육군의 월북과 우리 기자단의 방문이라는 사안은 분명히 서로 다른,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입니다. 다만 만약 트래비스 킹의 월북 사건과 유엔사의 우리 기자단 판문점 출입 불허라는 두 사안 사이에 상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통일부에서 유엔사와 조속하게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날짜상으로 보면 분명 23년 7월 이후에 유엔사의 판문점 일반 견학 취소라든지 방문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든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로마 바티칸 교황청의 유홍식 추기경님께서 출국하시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DMZ 안은 대한민국 영토주권이 미치지 않는 땅인가? 그래도 내가 추기경으로서 판문점을 방문하겠다는 것을 불허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괴감을 느낀다. 이것 분명히 시정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아프게 들었습니다.

○**이재강 위원** 장관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자단의 판문점 방문을 불허했고 추기경님의 방문마저도 기한 촉박을 이유로 불승인했습니다. 유엔사에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 땅에서 우리의 민족을 향해 내미는 평화의 손길마저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관님, 대한민국 기자단에서부터 유홍식 추기경의 판문점 방문까지 어느 하나 군사적 성질에 속한다고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본 위원의 생각에는 현대 자유민주사회에서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언론의 자유와 인류 보편의 가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대변하는 종교적인 사안인 만큼 본질적으로 가장 비군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통일부에서 하루속히 유엔사의 자의적인 판문점 출입 판단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통일부의 향후 계획이 정리되는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말씀하신 대로 유엔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 DMZ 안에서의 평화적 이용과 보전에 관한 법률이 이것이 국회를 통과해서…… 정전협정과 물론 경협관계에 있게 되지만 그렇게 되면 1억 5000만 평에 달하는, 250km 곱하기 DMZ의 2km 합치면 500km²지요. 1억 5000만 평에 상당하는 땅에 대한 영토주권을 되찾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강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진 위원** 최혁진입니다.

통일부장관님, 오늘 이야기 중에 북한이 대남 화성기를 철거했냐 안 했냐 이런 이야기

들이 계속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 몇 년 동안 걸핏하면 내전도 불사하겠다는 무인기를 날리고 도발적인 그런 행위들을 했던 정부가 끝난 지가 얼마 안됐고 새 정부가 이제 겨우 출범했는데 약간의 유화적 조치를 했다 그래서 바로 꼬리를 내리면 그게 바보, 멍청이지 일상적인 국가의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북한이 지금 우리 쪽에서 대북방송들을 철거했다 그래서 바로 조치가 나올 거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말씀하신 중에 유화책이라는 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유화책이 아닙니다. 유화책이라는 건 상대방의 공갈 협박에 굴복해서 순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화책이 아닙니다. 북의 협박을 받아서 한 게 아니고 비정상을 정상화한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전단을 날려 보냈더니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확성기를 틀었더니 소음방송이 오고, 이건 분명히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이것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선제적 조치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최혁진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적어도 남북기본합의서를 충실하게 지키겠다는 하는 원칙을 보여 주고 평화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정부가 한 20년쯤 갈 거다라는 확신이 생기면 북한도 핵을 포기하고 전향적인 조치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PPT 올려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ODA 사업 관련해서 하나 여쭙보려고 하는데요. CTS 사업이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최혁진 위원** 외교부에서 한 10년 동안 KOICA에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서 개도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시드1, 시드2, 시드3 이래 가지고 시드1은 사업을 발굴하는 단계일 테고 그다음에 시드2는 사업화, 세 번째는 현지에 확산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열어 주시면, 제가 일본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우리하고 대충 업력이 비슷했습니다. 한 12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일본은 보니까 해당 사업의 세 번째 단계, 확산 단계에 가게 되면 최대 2억 엔, 한 18억까지 지원을 하는데 지난 한 10년 동안 1500건 정도의 사업화에 성공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글로벌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약소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사회문제를 단순히 일회적 지원이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소셜벤처나 글로벌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일반 혁신적 기업들을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해결하겠다는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인 것 같고 개도국에서도 상당히 환영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프랑스도 아주 열심히 해서 프랑스는 스케일업 단계에 가게 되면 한 65억 정도를 지원해서 혼합금융으로 지원을 하더라고요. 정부의 재원 플러스 금융투자까지 연계해서 아예 개도국에 정착화해서 개도국 현지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고 이 사업들을 계속 키워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상황은 어떤가 한번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대략 우리는 10년 동

안 도대체 얼마나 이 사업을 했냐? 일본이 아까 제가 1500건 정도 했다 그랬는데요 우리는 10년 동안 저게 몇 건인가요, 한 100건 남짓 되려나요? 팔십몇 건 정도, 10년 동안 한 게 총 팔십몇 건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시드3 자체는 아예 올해는 없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미온적인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제가 외교부에 물어봤습니다, KOICA에도.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일이 진행되냐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국내에는 역량 있는 기업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냈는데, 국제사회의 상황들을 보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기 ‘노을’이라고 하는 소셜벤처인데, AI 기반의 휴대용 의료기기지요. 인터넷 연결하지 않고도 혈액검사를 할 수 있는, 개도국에서는 굉장히 필요한데 워낙 기술력이 좋아서 스위스까지 진출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투자까지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드3 못 갔어요. 우리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기업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에누마’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여기도 KOICA CTS 사업에 참여해서, 얼마 전에—몇 년 전이지요—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CTS 관련 기업들의 총 경진대회를 했는데 여기서 1등을 했어요. 상금만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CTS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정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특히 윤 정부 와서는 굉장히 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여나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하도 ‘소셜’ 자 들어가고 ‘사회’ 자 들어가면 금기시한 그런 경향이 이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최근에 일본 JICA 쪽에서 저희 쪽에, 의원실에도 간접적으로 연락이 전해져 온 게 이쪽 분야에 150조의 투자펀드를, 임팩트펀드를 일본이 만들었는데 일본의 문제는 일본의 청년들이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대요. 한국의 소셜벤처 친구들을 만났더니 한국은 한국 정부가 잘 도와주지를 않으니 차라리 자기들 펀드가 한국하고 연계돼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한일 수교 60주년이라고 하니까 저는 외교부에서 한번 JICA, KOICA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으로 이런 민간 차원의 포럼이나 상호 자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우선 CTS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동안 부진했던 원인을 잘 분석하고 앞으로 이게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의 ODA가 분절화돼 있고 또 재외공관이 간혹 소외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일 간 협력에 대해서는 아주 창의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깊이 들여다보고 시범사업이라도 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위원 조국혁신당 김준형입니다.

조현 외교부장관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느낌이 들었는데 맞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특별히 낙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급적 긍정적인 것을……

○김준형 위원 저도 관세협정에 대해서는 꽤 선방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오히려 지금 안보 압력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매일 고민 중인데 그래도 긍정적인 것을 들으면서 안심이 되는 한편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미국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시는 건가, 아니면 미국의 의도를 알지만 우리의 전략을 모호하게 만들기 위해서 허허실실 하시는지, 후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래도 저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관님께서 루비오하고 7월 31일 날 회담 끝나고 나오셔서 동맹 현대화해 나가야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때도 제가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셨고요. 오늘도 국방력 강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보고에서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을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의 용어들이, 전략적 유연성, 전략동맹, 동맹의 현대화는 지금 미국 군부에서 엄청 공격적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변화시켜서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 지역군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대만 유사시를 포함해서 한국군의 유연성, 다시 말해서 한국군을 동북아에서의 분쟁 시 동원할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어서, 미국이 아시다시피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전략적 유연성을 우리한테 밀어붙였고 중간에 잠잠하다가 지금은 명시적으로 한국에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운명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에 당시 노무현 정부 때 계셨던 분이 세 분이나 계세요. 위성락 안보실장님 그다음에 이종석 그리고 조현 장관님께서도 그때 파견되셨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어떤 예단도 없이 미국 측과 잘 협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미국 내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미국 정부의 정책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통보하거나 협상에 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준형 위원 저는 이번에 트럼프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분담금이나 국방비 숫자에 더 관심을 둘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도전 중의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자면 제이비어 브런슨은 아예 우리를 중국 앞에 놓인 항공모함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저는 지난 정부에서 한 발언이긴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도 이렇게 발언하는 연합사령부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자체도 이해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지난 6월에 미국에서 이란 핵시설을 폭격했을 때 어디서 출발해서 폭격했습니까? 미국에서 날아갔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카타르에 중동의 미군 최대의 기지가 있고 F-35 폭격기가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건 두 가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김준형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조현**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그 기지를 활용할 수 없었던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김준형 위원** 비밀 유지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비밀 유지를 위해서……

○**김준형 위원** 저는 카타르하고 우리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타르 정부가 이것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왜? 아무리 미군이 카타르에 기지를 갖고 있더라도 거기서 발진해서 이란을 때리면 이란과 전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이 대만을 때린다면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미국과…… 전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권으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이번 기회에 그것을 선명하게 꼭 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은 그것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이 부분이 정말 힘들면 오히려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 가지고 국민투표에라도 맡겨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모도 우리의 젊은이들을 유사시에 대만에 보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 한미 관세협상 이후에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고 또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우려나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점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어떤 부분인지 국회에서 궁금해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정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것은 우리 외교부 소관이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서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주미공관에서 사실상 미 의회를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도 하고 계시고 외교적 창구의 총괄적 책임자로서 외교부장관의 역할을 또 부처의 역할을 기대하는 바이기 때문에 잠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마스가(MASGA) 프로젝트라고 해서 굉장히 핫했는데 최근에 우리 언론들 기조를 보면 ‘쉽지 않다. 몇 개의 법안들이 나와 있고 그 규제 완화 법안들이 사실상 미국 내 노조들의 반대로 인해서 진척이 쉽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기사가 굉장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7월 30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조선산업을 협상 테이블로 올린 것은 탁월한 선택이라고 봤고 대선 전부터 저는 조선산업만큼은 우리가 감이 될 수 있는 영역으로서 적절한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 협상 판을 뒤흔드는 그런 저력을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조선업 지원이 아니라 한미 간 공급망 협력 그리고 또 산업 경쟁력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 또 안보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제대로 성공시켜야 미국과 한국 기업의 니즈를 충족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도 미국의 보호주의 공습 속에서 이익을 챙기는 묘수를 우리가 발휘하는 부분일 수 있는 그런 섹터거든요.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 중의 하나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 언론들이 우려하는 측면이 규제 완화적인 측면입니다. 존스법을 상징적으로 예를 들면서 규제 완화법의 추

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미국 조선업 관계자들이 해외 함정 건조나 외주 이런 것들을 일 자리 위협으로 인식하는 노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국회의 논의가 미진하다라고 하는데 속단하기 조금 이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지난 7월 30일 관세협상 이후에 8월 6일 미 해군 공공 조선소 보호법으로 번역되는 프로텍팅 퍼블릭 네이벌 십야즈 액트(Protecting Public Naval Shipyards Act)가 초당적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규제 완화 부분이 아니라 고용 안정을 보장으로 하는 내용이거든요.

가만히 이 법안을 들여다보면 이 법안은 뉴햄프셔 같은 대형 조선소 소재지의 국회의원들도 함께하고 있지만 여야가 또 공히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넘어서겠다라는 의지가 보이고 가능성이 좀 맞닿아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추이도 한번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내용으로 해서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이 법안을 넘어서겠다라는 액션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의 지역구 이해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 반드시 개별 의원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동력이 생기는 지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상하원 동시에 발의된 십스(SHIPS)법 같은 게 있는데요. 이 내용도 주목할 부분이 있는 게 법안의 발의자가 소위 말하는 트럼프 측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드 영이라든지 트렌트 켈리 하원의원 같은 트럼프 측근들에 의해서 어떤 전반적인 동력을 갖추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가 프로젝트 합의한 한국에 좀 호신호이지 않나라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상황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우리 부처의 소관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산업부와 같이 아울러 가는 주도적 부처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 정치인으로서도 민감국가 지정 사태와 같이 괜히 예민한 문제를 들어서 될 일도 안 되게 하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의원외교의 역량들을 고려하신다면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 내용 들여다봐 주셨으면 합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감사합니다. 존스 액트는 물론이고 타이틀 10,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장벽들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반면에 또 좋은 기회가 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또 거기에서 필요한 법률회사도 고용하고 해서 이 일을 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 부처가 있지만 누가 주이고 누가 종이나 하는 것을 떠나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위원님 그리고 여기 위원회에 와서 잘 보고드리고 또 지혜를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재정 위원 모든 법의 추이는 알 수 없지만 방금도 제가 8월 6일 발의된 법안들 예의 주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있고, 실제 사오 년 전이었나요? 미 하원에서 모든 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해 가지고 종전선언 결의안과 같은 내용이 국방수권법의 부수 조항 방식으로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저희 의원실이 미 의회 보좌관으로부터 연락을 들어

가지고 먼저 알게 됐거든요. 대사관에서는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챙겨야 될 부분들은 대사관 스스로의 역량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이런 추이의 과정들 살펴 주십사 했으니까 특별히 주미공관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질의할 차례인데 혹시 양해해 주시면 그냥 이 자리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조약과 국제협정에 대해서는 외교부, 정확하게는 외교부 국제법률국이 유권해석을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그것 관련해서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2011년에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된 한미 FTA 협정문 제2.3조는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 한미 간의 관세협상 결과는 이러한 한미 FTA의 제2.3조의 핵심 조항을 정지 또는 무력화하는 효과를 가져와서 사실상 조약의 변경·정지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은 한미 FTA 관련 조항과 관련해서는 어떤 설명을 해 왔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그러니까 미국이 한미 FTA상 제23조의2에 대한 안보 예외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명하거나 이런 건 아직 없는 상황이네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저희로서도 자칫 한미 FTA를 폐기하거나 또는 지금 말씀하신 어떤 조항이라도 폐기가 되거나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익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면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한미 FTA 제2.3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판단을 내리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럴 여지가 있고 이런 것을 지금 단계에서 법적으로 접근을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그렇다면 헌법 제60조제1항에서는 국회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돼 있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 역시 조약의 개정, 정지에 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국회 동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한미 간에 이 조항을 분명하게 폐기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국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외교부에서 또는 우리 정부에서 미국의 조치를, 미국의 관세협상 요구를 우리가 수용함으로써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한 바는 있으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위원장대리 김건 있으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위원장대리 김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외교부장관 조현 조금 시간을 두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사실 잘 아시지만 트럼프 시대는 뉴노멀입니다. 그야말로 알 수 없는 것을 미리 대비해야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이고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조치를 정부가 하지는 않도록 상대국을 설득하는 것도 우리 국익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유의하셔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다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곧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위원장대리 김건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이제까지 노무현 정부 이래로 항상 정권 초에는, 정부 초기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 한 번도 주미 대사가 공석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위원장대리 김건 그것은 한미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바뀔 때마다 최우선적으로 주미대사를 임명해서 한미 정상회담 때는 대사가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일·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도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사가 다 공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하고 또는 일본하고 제대로 정상회담 준비가 가능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그렇다면 대사가 없어도 되는 거네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아마 제가 드린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외교 공백을 초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30여 개국의 공관장이 비어 있고 특히 당장 정부 초기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미국 일본 중국, 이런 중요한 국가들에 대해서도 지금 다 공석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는 제가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미 회의를 한 지가 2시간 반이 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 하었다가 2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5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3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원 위원** 외교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해외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 또 기획 귀국 의혹 관련해서 저는 이 일을 외교를 아주 나쁜 방식으로 정치에 이용한 매우 악질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엄격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12월 초에 외교부가 당시 김완중 주호주대사에게 후임자 임명 예정이니 1월 중순까지 귀국 준비하라고 통보했다고 하는데 이종섭 대사 적격심사는 2024년 1월 16일에 개최됐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12월에 현직 대사한테 귀국 통보를 했다는 거지요. 이게 정상입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뭔가 이상하기도 하고……

○**홍기원 위원** 적격심사 하기도 전에 이미 통과하고 그렇게 통보한 거나 똑같은 거지요. 그리고 출국 금지된 게 문제가 되니까 법무부가 부랴부랴 해 가지고 출국 금지를 해제했잖아요. 그래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2024년 3월 10일 날 출국했는데 현지에 있는 대사는 귀국 비행기를 타지도 못한 때에 이종섭 전 대사가 호주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 동시에 2명의 대사가 있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간혹 있는 일입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특검에서 이 모든 것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검에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PPT 좀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3월 21일부터 열린 방산공관장회의 일정이 불과 행사 하루 전에 참석 공관장들에게 통보됐습니다. 참석 대상 국가들이 중국이나 일본처럼 가까이 있는 데도 아니고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비행시간만 최소 10시간에서 13시간, 경유하면 20시간도 훌쩍 넘기는데 통보받자마자 바로 항공편을 예약하고 들어온 거지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반면 그해 4월 22일 예정되어 있던 재외공관장회의는 보통 한 달 보름 내지 두 달 전에 항공편이 예약됐습니다. 그러니 방산공관장회의는 이종섭 전 대사,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크게 문제되니까 바로 회의를 날조해 가지고 들어오도록 통보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21일 진행된 1차 일정에는 이종섭 대사만 단독으로 참석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우리 국격이 훼손되고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외교부에서도 진상규명에 철저하게 협조해 주시고 또 이런 일이 없도록 내부적으로도 잘 대처하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웅 위원** 아까 본질문에서 아마 통일부장관님이 설명하셨는데 철거가 지금 1개인 지 아니면 지지대에 있는 여러 개인지는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고 만약에 제가 모르고 있

었다면 오류가 있었을 것 같고요. 하여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상황이 우리가 너무 이게 이거다 저거다 얘기할 단계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좀 봐야 되고 국민들에게도 정확하게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 지금 했다 안 했다는 얘기들이 너무 선불리 나가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교부장관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장관님께서 8월 3일 날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하신 건데요. 직접 하신 거니까 내용 맞으시지요? 맞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김기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말씀하셨다는 뜻으로 얘기드리는 거고, 이게 소신이신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이걸 띄운 이유가 중국이든 북한이든 잘못하는 게 있으면 잘못한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하는 것이 양자 간의 건강한 관계 발전을 위해서, 정상적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런 면에서는 국제법 준수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신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은 잘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다음 하나 띄워 주십시오.

이게 7월 29일 날 싱하이밍 대사가 한 발언인데요. ‘한국의 반중 여론은 극우세력이 조성하고 있다. 이들을 정부가 단속해야 된다’, 이게 지금 외교사절이 정부에 대해서…… ‘조성하고 있다’까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을 단속하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국제법이나 관례에도 물론 안 맞는 거겠지만 상당히 무례하고 제가 볼 때는 오만하고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제가 지금…… 싱하이밍 대사가 아닌데요. 25년 7월 29일 같은 면……

○김기웅 위원 얼마 전에, 한중 협의 회의 때.

○외교부장관 조현 전 대사였지요, 그러면.

○김기웅 위원 전 대사, 싱하이밍 전 대사 발언입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지금 주한대사는 다이빙 대사입니다, 다이빙.

○김기웅 위원 아, 대사가 바뀌었으니까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 인가요?

○이재강 위원 싱하이밍은 저런 말 안 했습니다.

○김기웅 위원 안 했어요? 25년 7월 29일 날 한 거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외교부장관 조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싱하이밍은 지금 주한중국대사가 아닙니다.

○김기웅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람이 전 대사든 개인이든 떠나서 지금 우리 정부에 대해서 저런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어떤 말

씀하실, 지적이라든가 이런 걸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외교부장관 조현 글썄요, 제가 좀 더 싱하이밍이 이런 발언을 했는지 또……

○김기웅 위원 확인하셔야 되겠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리고 추가로 좀……

○김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웅 위원 예.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 통일부장관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8·15 독트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정말 인상 깊은 것이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 상호 존중하지 않겠다. 그리고 평화공존의 길을 걷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이지요, 윤석열 전 정권에서 윤석열이 8·15 독트린을 선언했었습니다. 자유민주통일을 지향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어떻게 보면 통일정책이 정반대로 간다라는 좀 획기적인 변환점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변화의 차이, 어떤 목표인지, 무엇을 지향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엇그제 8·15 경축사는 작년 8·15에 발표되었던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 경축사에서 북한 주민을 해방하고 체제 변화를 꾀하겠다, 그리고 자유를 북으로 확산해야 한다, 이것은 북한 붕괴론을 말합니다. 그리고 흡수통일론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것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래 30여 년 동안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남북의 평화공존 노선, 평화통일 노선을 부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 시대에 했던 북진통일론을 자유로 포장해서 자유의 북진론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 엇그제 이재명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3대 원칙, 첫째 북한의 체제를 존중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흡수통일은 하지 않는다, 적대적 행위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 3원칙에 입각해서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 처분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상화, 그러니까 대한민국정부의 대북정책의 정상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욱 위원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통일정책이라는 것이 미국이나 또 중국 러시아 일본, 다 지정학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존경하는 김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군까지도 지역군, 전략군으로 같이 가자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걸 동맹의 현대화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북한은 중국보다는 러시아와 좀 더 밀월관계로 가고 있고 또 러시아와 미국이 가까워지고 있는 복잡한 이런 지정학적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흡수통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호 존중한다 이런 통일론과 지정학적 변화, 통일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이 길을, 통일의 길을 이 변화와 환경 속에서 방향을 찾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이것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다시 천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국들도 다 이를 환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되는 것을 원하는 주변국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북 3원칙에 의해서 긴장이 완화되고 그리고 평화가 정착된다면 그것은 동북아 평화·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3일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동북아의 지정학이 크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반도의 정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지호 위원님 안 계시고,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외교부장관님, 아까 하던 질의를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군사 문제 관련해서 지난 9일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역시 ‘한미 관세협상에서 대북 억제책을 계속하는 동시에 대중국 억제를 더 잘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을 지지하는 성명을 한국이 발표하도록 요구하려 했다’ 이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사실이 아닙니다.

○이용선 위원 이것도 사실이 아닌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이용선 위원 지금 소위 동맹의 현대화가 그야말로 당연한 것으로 업무보고에서 적시되고 있고 또 이 표현에 의하면 소위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 의제를 넘어서서, 대북을 넘어서서 대중국 억제로까지 주한미군의 임무와 역할이 확장되는 것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마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의 한국 측에 대한 중요한 요청으로 제기되지 않을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잘 아시다시피 만약에 중국이 대만과 분쟁을 하게 되면 한국도 자동으로 끌려 들어가는 이런 결과를 빚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외교부장관 조현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가정적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2006년에, 좀 시간이 지났긴 했습니다만 한미 양국이 진지한 협의를 거쳐서 외교장관 성명을 통해 전략적 유연성 이행에 있어서 한국 국민의 의지와 관계없는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주한미군의 성격이 그런 만큼 이 기조를 잘 유지하는 데 장관도 정부도 원칙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PPT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외교부장관께 질의를 하려는데요.

이 파워포인트 보시면 이게 윤미향 전 의원 기부금 횡령 사건 전체 내용을 요약해 놓은 도표입니다. 그러니까 윤미향 개인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정대협 자금, 정대협 계좌에 보관했던 정대협 자금, 정의연 관계자 개인 계좌에 보관한 한국정대협 자금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무려 8000만 원을 횡령했다 이래 가지고 지금 형을 받은 것인데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8·15 때, 다른 날도 아닌 8·15 광복절 날 사면·복권을 시켰다는 말이지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께서도 30년 동안 할머니를 이용해 먹었다라고 하면서 후원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사안인데 이런 파렴치한을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에,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첫 사면·복권을 하면서 이 사면·복권을 했다. 거기다가 심지어 윤미향 전 의원은 검찰의 과잉 수사 탓이라면서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도 않고 있고 ‘오늘도 저것들이 나를 물어뜯고 있다. 자신을 욕하는 저것들이 참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8·15 때 사면·복권하는 것이 외교부장관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이건 외교적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하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위원 국무위원의 한 분이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래서……

○김기현 위원 사면·복권을 국무회의에서 의논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래서 제가……

○김기현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 답변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설명……

○외교부장관 조현 아니, 지금 마지막 쉐nten스(sentence)를 제가……

○김기현 위원 제가 다시 다 질문을 할 겁니다. 뭐 변명하고 싶으시겠지요. 내가 그날은 참석 안 했다고 하고 싶겠지요. 그렇게 하실 일이 아닌 것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외교부의 고유 업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일관계의 핵심 현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외교부 현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비겁하다, 외교부장관이. 외교부가 가장 중요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절절한 호소에 대해서 우리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김기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외교부의 현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아니, 제가……

○김기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서 반대한다고 의사를 표시하셔야 되는데 하셨냐고 물어봅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위원님께서 격양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따라서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기현 위원** 반대한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의견을 국무위원으로서 의사표시를 했느냐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아니, 제가 그 국무회의에 참석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기현 위원** 누가 참석했다고 제가 물어보지 않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현** 아니, 그러나 변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시다.

○**김기현 위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드리려는 이야기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김기현 위원** 그러면 지금은 국무위원으로서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아니,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가진 성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위원** 됐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

○**외교부장관 조현** 아닙니다.

○**김기현 위원** 적어도 반대하는 의사는 표시하셨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위원장님, 저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좋습니다.

○**김기현 위원** 답변 들을 것 없습니다. 뻔합니다.

.....

○**위원장 김석기** 다음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정회하고 난 뒤에 속개하는 시간에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상원의원이 국회로 와서 외교통일 위원장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왔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 조현** 예.

○**윤후덕 위원** 이게 좀 괴기한 외교적 문제가 있었던 것을 좀 해명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당선됐을 때 그다음 날인가 그 다음다음 날 백악관 대변인인가 하는 분이 좀 이상한 논평을 냈어요. 그때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행사를 우려하고 반대한다’ 이런 식의 이상한 논평을 냈어요. 이게 마치 우리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서 부정선거니 음모론 이런 것 같은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제가 솔직히.

그런데 그로부터 두 달 후인 7월 31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산뜻하게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 그리고 ‘2주 만에 만나자, 정상회담 하자’ 그래서 이제 25일 날 정상회담을 하지요. 그 두 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탄생했는데 그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문제

가 되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때 국무부의 성명이 있었지요. 미국 측으로부터 미국의 입장은 국무부의 성명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의 그 성명은 축하한다는 말에 이어서 자기들이 늘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을 덧붙여서 한 것이지 우리와 반드시 연계해서 해야 될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우리가 문제 삼을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그래도 두 달 후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께서 산뜻하게 ‘축하하고, 만나자’ 이렇게 한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윤후덕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이틀테면 외교부에서 이게 아니다, 우리는 산뜻하게 선거를 치른 그런 나라고 민주당이나 이재명 신임 대통령께서 미국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동맹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다 이런 외교적 활동을 한 거예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님, 개별관광에 대해서 자료제출한 것을 보니까 이것은 유엔의 제재나 미국의 제재나 그런 제재에 관계없이 개별관광은 북한에 가서 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판단을 하고 자료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개별관광이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구체적으로 지금 개별관광의 요건에 대해서 유엔 제재 목록 리스트에 있는 건 없는 걸로 압니다. 그냥 이게 벌크 캐시, 그러니까 뭉텅이로 현금이 들어가는 건 안 된다, 그래서 단체관광은 안 된다, 단체관광을 하게 되면 다액의,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후덕 위원** 아니, 미국에서도 어느 의원님이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을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그런 법을 냈어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예를 들면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북측에 초청 의사를 확인한 뒤에 방북 승인을 받아 북한을 방문하는 것, 이것을 개별관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 경우에 관광 경비는 숙박비, 식비 등 현지 실비 지급 성격이다 이렇게 봅니다.

○**윤후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강 위원**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해피망측한 질문이 아닙니다.

장관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받으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이재강 위원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써 민생경제와 내수시장에 활력이 돌고 있습니다. 전국 소비쿠폰 신청률이 96%에 달합니다. 그런데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거주 동포입니다. 자료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국내 거주 동포는 86만 명인데 유형별로 보면 F-4 재외동포 그다음에 영주, 방문취업, 방문동거 등 이 중 F-4 비자, 재외동포비자 소지자가 55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F-4 비자 동포들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기준만 보면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동포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려인 동포입니다. 고려인 동포 대부분은 F-4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주 광산구에는 4000명의 고려인이 자영업과 일용직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내셨습니다. 인권위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을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는 대책에서 배제하기보다 사회적 연대의식을 강화하고 공동체의식을 향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경기도부지사 할 때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내 등록 외국인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배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각종 위기 대응과 민생지원정책 수혜 대상에 동포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국내 거주 동포를 포함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고 또 내수에 기여하는 경제주체입니다. 또 주로 다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동포를 포용하는 것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국제사회에서 포용적 복지국가로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재외동포청장님, 국내에 거주 중인 동포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또한 향후 재난지원금, 소비쿠폰 등 국가 차원의 민생지원정책에서도 국내 거주 동포를 제도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재강 위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진 위원 통일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24년도 회계 결산 관련된 내용인데요. PPT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4회계연도 DMZ 평화적 이용 사업 결산 현황인데요. 전체적으로 한 94억 예산 중에서 집행액이 17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북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이유이겠으나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을 텐데 굉장히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들이 안타깝게 여겨지고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한 톨도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가 이렇게 미온적인 틈새에 국정농단 세력들이 이 틈새를 치고 들어와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PPT 자료 보여 주시면, 지난번에 제가 김충식 씨 관련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과 내란의 핵심 설계자로 김충식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특검법을 발의했더니 저한테 전화를 직접 해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과주시 장단면 노상리의 국가 땅 8000평을 어떻게 분할을 받아서 사적으로 이용했느냐?’라고, ‘도대체 정부의 어느 부처에서 그런 것들을 인허가를 해 줬느냐?’라고 했더니 김충식 씨 이야기로는 ‘행안부와 통일부에서 도와줘서 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통일부에 별도로 물어봤을 때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내용 관련해서 통일부에서 정확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다음이 더 황당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김충식 씨가 설계를 한 설계도 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DMZ에 유엔사무국을 유치하기 위해서 9만 평 부지를 별도로 확보했다. 공간은 경기도 연천군 중면 합수리 산 110-1번지 일원의 9만 평입니다. 이게 그냥 황당한 만화 얘기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PPT를 보시면 상황이 복잡합니다.

얼마 전에 김건희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을 서울남부지검에서 했지요. 그때 압수수색 영장에 쓰여 있는 내용이 뭐냐? 통일교의 청탁을 받고 유엔 제5사무국을 DMZ에 유치하는 내용과 관련된 압수수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통일교가 개입해서 김건희를 활용해서 DMZ에 유엔 제5사무국을 통한 평화 무슨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청탁했다는 내용입니다. 정확히 기획자는 김충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씨하고 통화해서 제가 몇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DMZ 일원에 통일교가 상당히 큰 규모의 땅을 매입을 해서 별도의 개발사업에 손을 대고 있다는데 잘 아느냐? 김충식 씨의 답변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습니다. 1100만 평입니다. 강남구만 한 땅이지요. 1100만 평의 땅을 정 모 씨가 자기에게 와서 증거서를 직접 주면서 독일 같은,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진 평화의 도시를 만드는 것을 요구해서 그 일환으로 앞에 8000평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00만 평의 땅을. 지금 현재 정 모 씨는 통일교 관계자로 추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통일교 쪽에 물어봤습니다. 통일교가 DMZ 인근에 이 정도의 땅을 별도로 구매한 바가 있느냐? 통일교 땅이, 대략 1200만 평을 구매했고 최근에 경영적인 이유로 100만 평은 매각했다라고 합니다.

저게 팩트일까 해서 다른 루트로 고성군 일대에 매입했다는 땅 부지들의 등기부등본을 알아보니 현지에 국가의 땅 사이사이 민간 땅이 대부분 다 상세불명의 일본인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세불명의 일본인이 DMZ 인근에 땅을 살 수 있느냐? 정부에 물어보니까 교포인 경우에는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어떤 의심을 하고 있느냐 하면 김건희에게 통일교가 청탁을 해서 DMZ 일원 개발 요구를 하는데, 저기는 개발을 해도 사실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안보상의 불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런 땅을 대규모로 했는가? 통일부가 좀 자세히 파고들어서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요.

이번에 내란 세력들이 내전까지 감행하려고 했던 것들과 통일교가 DMZ 인근에 1200만 평의 땅을 사고 여기에 평화의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기획으로 개발 투자에 나선 것이 과연 전혀 무관한 일이겠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파헤치시고.

저는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의 DMZ 평화적 개발에 대해서 100% 찬성합니다. 다만 국정농단 세력이 개입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뿌리째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이와 관련해서 통일부에서는 접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교 땅과 관련해서 DMZ 안에 과연 1200만 평이나 있는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기** 다음은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형 위원** 조국혁신당 김준형입니다.

장관님, 저는 아까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미국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전부 다 너무 긍정적이고 미래, 현대화, 유연성, 그 속에…… 저는 미국의 전략적 필요는 이해가 갑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브린슨이 ‘거리의 폭정’이라는 말까지 표현을 하면서 미국이 너무 멀다. 그러면 한국하고 일본을 이용하고 싶어 하겠지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 우리가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먼저 말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드라인을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 레드라인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서로에 대한 상호방위조약을 넘길 때는 국회와 국민들한테 물어야 된다는 그 원칙을 꼭 지켜 주시면 좋겠고요.

대만 유사시에 우리가 개입해야 됩니까, 장관님? 장관님 생각은요?

○**외교부장관 조현** 가정적 상황이지만 저는 미국에 대해서 항상 동북아의……

○**김준형 위원** 아니요, 말씀하시지요. 대만 유사시……

○**외교부장관 조현** 아니요, 끝까지 좀 들어 주십시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현상 유지를 급격하게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그 어느 나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준형 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유사시가 되면 우리가 개입해야 됩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러니까 그 유사시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김준형 위원** 장관님, 저는 그냥 바로 대답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조태열 장관도 안 된다고 했고요 신원식 장관도, 지난 정권에도 이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됩니다. 미국의 합법적인 땅이 아닌데 왜 우리가 대만에 개입해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전부 오버라고 말씀하시는데 미국에서는 공공연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가정적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지금 좀 당황스러운데요. 우리에게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이지요.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중국이 우리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대만해협의 안정을 바란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요. 그런 제너럴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만의 유사시에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이것을 왜 분명하게 말씀 못 하시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대만 유사시 상황이라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준형 위원** 아니요, 어떤 원인이든 왜 우리가 가야 됩니까, 어떤 원인이든?

제가 지난 4월 29일에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을 냈습니다. 지금 계류 중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다들 생각이,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정부가 곤란하면 오히려 국회가 이 결의안을 통과시켜 놓으면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조태열 장관한테 협조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그때는 결의안을 내지도 않았는데 협조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부의 협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 늘 나오는 얘기는 한데 ODA 무상원조체계 외교부장관님께 여쭙려고 하는데, 여전히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이번 결산에서도 구조적 한계가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다부처 협업 ODA 패키지로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패키지 사업 한번 들어 보면 기재부 EDCF, 외교부 KOICA 그리고 행안부, 3개 부처가 각각 맡은 사업 네가지를 묶어서 진행한 것인데요. 결국은 패키지 핵심이었던 기재부의 EDCF 사업이 수원국 사정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줄줄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립니다. 전체의 성과가 붕괴가 된 것인데요.

이게 단순한 시행착오라기보다는 여러 차례 반복돼 왔고 이것이 처음이 아닌 일인 게, 무상원조가 부처별로 쪼개져서 기획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그저 형식적 통합으로 사업을 묶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컨트롤타워가 기획하고 조정하고 위험을 분산하는 과정을 거칠 수 없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 아닌가, 만약 그런 통제체제만 됐었다라면 연쇄 취소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위험 분산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ODA 예산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바람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조를 들여다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행스럽게도 13일 정부가 무상원조 통합에 대한 국정과제를 포함시켜 발표를 했습니다.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

데 그 내용을 보더라도 여전히 조금 부족하지 않나. 지금 이것을 풀어낼 주체는 사실상 외교부라는 생각이 있는데 조정 권한이 일부 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시행기관이 시정의무를 지는 것도 아니고, 장관님 입장에서는 무상원조 통합의 단계에서 지금 발표된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로 드신 인도네시아의 경우 큰 덩치가 있는 것은 EDCF를 활용하고 소프트웨어는 외교부에서 무상원조로 지원하고 그리고 기술은 행안부에서 가고, 이게 잘되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된 것은 무엇보다도 대사관의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상원조 통합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사관의 역할을 항상 강조하고 그를 통해서 원조 자체의……

○이재정 위원 10초 남짓 남아서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마지막 덧붙여 주시면 좋겠는데, 저도 훨씬 더 주도권 쥐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그 구성에 대한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올해 12월 4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하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무상원조 통합 완결하고 외교부가 주도권 쥘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초안부터 좀 주도적으로 개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국조실이 총괄하기는 하지만 국조실이 총괄한다는 이유로 자리를 물리고 뒷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외교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실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꾸준히 국회와 소통해 주시고, 그렇다면 국회로서도 필요하다면 제도 보완을 통해 가지고, 입법이 필요하다면 입법까지도 해 가면서 같이 상의할 의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런 의지가 충분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재정 위원 아까 못 하셨던 얘기 덧붙이셔도 되는데요.

○외교부장관 조현 아주 좋은 계획을 잘 만들어서 하다가 결국 잘못되는 것을 보면 항상 대사관을 제치고 무슨 일을 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무상원조든 유상원조든 그 핵심에는 양국 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사관이 빠져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김건입니다.

통일부장관님, 통일부가 2018년부터 발간해 온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는 중단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정확한 보도는 아닙니다.

○김건 위원 이 사업 추진 근거는 북한인권법 제13조이고 북한인권법은 2016년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보고서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외 공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대외 비공개를 떠나서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은 정권과 이념을 떠난 보편적 가치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시간이 흐르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가가 이 기록을 멈춘다면 피해자의 목소리는 역사의 어둠 속으로 묻히게 됩니다. 통일부에서는 앞으로 고려하실 때 북한 인권 개선이라는, 본연의 책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김건 위원** 다음, 장관님께서서는 최근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지침을 전격 폐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고만 하면 북한주민 무제한 접촉이 허용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통일부 업무에서도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개정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주민 접촉신고 현황을 보니까 69건 중에서 단 2건이 거부되었는데 거부 사유가 하나는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명백한 우려 또 하나는 유엔 제재 위반 우려 이렇게 거부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다 그러면 앞으로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국제법을 위반하려는 접촉도 모두 허용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통일부의 존재 목적 자체가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류협력이란 화해든 만나야 되는 것이고 만나야 대화가 되고 대화가 돼야 서로 알아지는 것이고 그래야 화해와 협력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허가제처럼 운영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허가제를 폐지한 겁니다.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북한 주민을 접촉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이 꼭 정부가 규제하고 제한하고 제약해야 할 그런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주권자 국민의 양식과 판단을 신뢰합니다.

○**김건 위원** 지금 장관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가 허가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통일부장관 정동영** 허가제처럼 운영한 것을 폐지한 겁니다.

○**김건 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신고제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다음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장관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교류라고 하지만 북한에는 민간이 없습니다. 다 정부의 지침을 받는데 그런 접촉에 있어서 정부가 최소한의 신고를 받아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금의 제도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개정에는 반대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지금의 제도는 신고제를 악용해서 정부가 허가제처럼 수리 기한을 가지고 접촉을 막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 비정상적인 현실을 바로잡은 겁니다.

○**위원장 김석기** 다음 김영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아까 했던 게 하도 황당해서 다시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세종연구소 판교 부지가 지금 지도에서 보시듯이 아주 노른자 땅이에요. 경부고속도로

등 고속도로가 여러 개 지나가고요 성남시청으로부터 2km 정도 떨어졌다고 하니깐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는 자연녹지에서—지금 현재 자연녹지거든요—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이익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할 수가 있으면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놓고 뭐라도 할 것 아닙니까? 시청에서 다 합의가 됐다고요, 이게. 준주거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을 폐기하고 이걸 LIG에다가 3000억에 팔아먹은 거예요.

이것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이걸 누가 도대체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하겠습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해먹는 수법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권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아까 감사원 감사, 수사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이것 한번 들여다보시고 다음에 차후 다시 한번 논의하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외교부장관님께 여쭙게요.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해서 우리가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내용의 핵심 중의 하나가 안보동맹, 경제동맹에서 기술동맹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당장 윤석열 정부 때 민감국가로 우리가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지정이 됐거든요. 이게 안 풀리는데 기술동맹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민감국가 지정을 해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지난번에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617명의 정원이 536명으로 81명이 줄었거든요. 그중의 대다수가 남북관계 관련된 조직과 인력입니다. 지금은 남북관계관리단이라고 해서 직원이 달랑 8명 있는 걸로 알거든요.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서 베테랑 공무원도 없고 그런데 지금 윤 정부에서 해체된 개성재단도 재설립해야 되고 남북협력기금 예산도 이전 수준으로 돌릴 뿐만 아니고 오히려 더 확보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조직이나 인력 확보 방안이나 혹은 예산 확보 방안, 개성재단 설립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국회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내년 개성재단 복원 관련해서 지금 기재부가 예산을 미반영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좀 밀어주시면 그것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인력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인력도 지금 행안부와 해서 정원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원래 원위치로 돌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지호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셨는데 하시겠습니까?

○차지호 위원 예.

○위원장 김석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지호 위원 시간이 짧아서 외교부장관님께 짧게 말씀드리고 통일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에는 ODA로 제안되는, 표방되는 국제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저소득국가에서 고소득국가로 로드맵을 펼쳐 놓고 잘살게 만들어 주는 이 프레임은 사실상 지금까지 몇십 년간의 국제개발 현장에서 한계에 많이 부딪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기후변화와 AI 전환과 같은 전 지구적 위기와 변환 요인이 있을 때는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아니라는 게 여기에 가장 앞선 학계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프로그램 자체도 제한된 예산으로 굉장히 많은 욕심을 내기 때문에 효과성은 극히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 글로벌 위기적응 프레임이라는 다중위기에 지역적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전 세계 학계들의 논의들이 있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펀딩 메커니즘, 일종의 기존에 실패한 ODA 메커니즘의 대안을 찾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유럽에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리더십을 잃어 가고 있을 때 한국에 대한, 국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대통령께서 유엔과 APEC으로 이어지는 무대에서 만들 수 있는 글로벌 어젠다의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 저는 더 이상 선진국의 실패를 빠르게 따라가는 형태의 모델이 아니고 한국에서 이 전환기에 새로운 모델들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전에 있던 시스템을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닌 새로운 형태의 논의들을 촉발시켜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통일부장관님께는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이 지금 현재 백방으로 노력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무너진 소통 채널들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게 후퇴한 만큼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예전에 분쟁지역에서 일할 때 무너진 소통을 회복하는 핵심은 상대방의 니즈에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니즈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북한은 포스트 전환 상황, 포스트 러·우 전쟁 그리고 포스트 경제제재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럴 때 북한의 니즈는 이런 전환기 때 어떻게든 정상국가로 나아가게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한국에 나쁜 거라고도 생각을 안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정상국가 그리고 필수 사회시스템이 주민들의 기본적인 안보를 지킬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가 그 힘을 만드는 분야, 그랬을 때 저는 한국에서 북으로 뭔가 들어가게 하기 전에 북을 다자간 협력 논의체제의 앞으로 끄집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정부 혹은 국제기구의 협의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날리지 익스체인지 플랫폼(Knowledge Exchange Platform)이라고 하잖아요. 비군사적 영역에 한정된 과학적 지식의 공유들에 대한 니즈가 북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저는 남북협력의 중요한 지렛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북도 국가전략 방향을 과교흥국,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는 게 정부 차원의 구호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니즈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상국가화, 국제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북한이 참여하게 될 때 남북관계의 평화 정착 내지는 확실한 민족공동체 회복의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차지호 위원** 구체적인 논의들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아직은 남쪽과 일체 접촉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 신청하신 위원님이 여섯 분 있습니다.

시간을 3분 드리겠습니다.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웅 위원** 제가 질문했던 것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PPT 하나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확성기 관련해서 하나 다시 정리를 좀 할 텐데요. 제가 저것을 일주일 훨씬 전에 합참·국방부에 요청을 하고, 보시면 철거 위치 그다음에 세트 구성, 출력 변화, 이 내역을 5~8월로 비교해서 자세히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계속 답을 안 주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14일 날 저녁에 저렇게 보내 왔어요. 그것도 철거 얘기는 없고 증설했다고만 하고 ‘소형 스피커를 증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도 저는 소형 스피커로 이해를 했고요. 세트라는 말도 없고.

저희 직원이 통화를 해서 물어보려고 했더니 다 혼련 나갔다고 그러고 통화도 안 되고 해서 결국은 저 자료 하나만 갖고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하게 됐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관님께서 국방부에다가, 지금 이게 큰 국가적 보안·비밀은 아니니까 국민들에게 그동안의 현황에 대해서, 한 세트인데 지지대는 남아 있고 앞엿것이 두 개 중의 하나가 갔다 다시 왔다라든가 하는 것들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서 혼선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여기서 혼선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사실 정확한 내역이 뭔지를 잘, 헷갈리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말씀하시니까 하나 바로잡을 것은 아까 스피커 셀, 작은 방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게 합쳐서 한 대입니다. 그게 지금 휴전선에 40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중의 한 대를 일단 철거했다는 것이고요.

○**김기웅 위원** 내일 다시 본인들이 설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들어 보고 저도 뭘 할

텐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누군가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는 게 좋겠다, 철거까지. 지금 여기는 철거 얘기도 없잖아요. 증설했다고만 왔는데……

○**통일부장관 정동영** 우선 그 시점이 5월 달, 6월 달입니다.

○**김기웅 위원** 글썽요, 하여간 보시면 헛갈리게 되어 있으니까 설명하라는 말씀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외교부장관님, 아까 싱하이밍 관련된 것은 이게 7월 29일 날 베이징에서 열렸던 25차 한중고위지도자포럼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싱하이밍이 발언한 내용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다,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게.

그런데 싱하이밍이 전 대사이기도 하지만 지금 중국 외교부 아주사의 국장급 관리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중국 외교부 국장급 관리인데 전에 대사도 한 사람이 이런 발언들을 이런 회의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리마인드해 드리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는 유감이 아니더라도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든지 경위 내지는 사실관계 확인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니까 그건 장관님께서 판단 하셔서 조치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요 저는 중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앞서 제가 했던 발언을 소개해 주셨듯이 그렇게 당당하게 할 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우려랄까, 예를 들어서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지나친 시위, 예를 들어서 사진을 불태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못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싱하이밍이 어떤 콘텍스트에서 어디까지 얘기를 했는지 좀 더 파악해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외교부장관께 질의하려는데요.

곧 며칠 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지난번 한미 외교회담을 7월 31일 날 하신 다음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시키는 데 양국의 의견을 같이했다’ 이렇게 외교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설명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 요인 때문에 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데 미 국무부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 이번 협의는 한반도에서 미군과 한국군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했던 말이지요.

이것과 관련해 조금 전에 김준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제가 얼른 들으니까 잘 납득이 안 되던데, 만약에 그러면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중국과 대만 사이에 어떤 전쟁이 벌어졌다 그랬을 때 그러면 주한미군의 병력이나 장비가 그 전투에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아닙니다.

○**김기현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의 장비나 인력, 모든 형태로 주한미군에 관계돼서 거기에 투입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러니까 제가 아까 김준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조금 더 소상하게 드리지 못한 것인데요. 뭐냐 하면……

○**김기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잡하게 설명하실 게 아니고, 이게 제가 들어도 납득이 잘 안 돼서 물어봅니다.

저는 주한미군이 대만해협의 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관님께 여쭙는 건데요. 이게 지금 동맹의 현대화 그러면서 거기에 주한미군이 개입하게 되는 형태가 된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어서 이것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의 대상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런 결과를 반드시 지킬 겁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물론입니다.

○**김기현 위원** 좋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그리고……

○**김기현 위원** 됐습니다.

PT 하나 띄워 주시면, PT 제일 마지막 것, 더 힐 것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더 힐에 나온 고든 창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인데요. 잘 아실 겁니다. 더 힐이라고 하는 것이 미 의회 전문지이고 워싱턴에서는 영향력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 언론인데, 이 내용에 보면 굉장히 듣기가 거북한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냉혈한 반미주의자, 미국이 한국의 식민지 지배를 유지하는 데 일조했다면서 비난했다 이런 형태의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이 고든 창이라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매우 가까운 보수 인사로 알려져 있고 심지어 올 2월 달에 메릴랜드에서 열렸던 ACU 주최 행사에서는 트럼프가 직접 ‘위대한 고든 창’이라고 불렀단 말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재명 정부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매우 반미적인 정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여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 하면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많은 것을 양보할 것 같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주류 인식들을 잘 설명해서, 납득시켜서 국익을 지킬 계획이 있으신지를 여쭙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대통령께서 일본을 거쳐서 미국에 가서 이번 정상회담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우려는 일거에 사라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에서 제가 처음부터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 왔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 위원님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현 위원님께는. 김기현 위원님께서 너무나 정열적으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저한테 전염이 돼 가지고 저도 격앙해서 얘기한 것을……

○**김기현 위원** 전혀 격앙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사과드립니다.

○**김기현 위원**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다음은 이재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강 위원** 의정부서울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재외동포기본법에 의하면 재외동포는 현재 체류하고 있는 국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우리 한민족을 일컫는 말입니다. 해당 법적 정의에 따르면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재외동포청은 해외 체류 동포뿐만 아니라 국내 체류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PPT 보십시오.

여기 국내 체류 동포 지원 사업 추진 보십시오. ‘국내 체류 동포들이 우리나라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한다’. 그다음 PPT 보시면 이어지는 내용에도 명확하게 국내 소재 동포 관련 민간단체 사업 지원, 정착지원안내서 제작 등의 계획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의 국내 체류 동포 정착 지원 전담조직 신설은 법무부와의 이견으로 그 출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관리라는 측면에서 국내 체류 동포 업무 또한 법무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본 위원은 재외동포를 단순히 외국인으로, 관리와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포용과 지원 및 동반성장의 정책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해당 관점에서 국내 체류 동포는 법무부보다는 재외동포청이 소관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외교부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당장은 지금 재외영사국에서, 즉 외교부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법제화를 해서 재외동포청에서 잘 다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재강 위원** 꼭 그렇게 명확한 역할을 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이재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형 위원** 김기현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결의안 통과에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아까 제가 좀 당황해서 실제로 질문해야 될 질문을 못 했는데요.

모스 탄 아시지요, 어떤 인물인지?

○**외교부장관 조현** 예.

○**김준형 위원** 아까 고든 창과 함께 애니 첸이라든지 심지어 전·현직 한국계 출신의 의원들까지도 그리고 지금 마가(MAGA)의 스티브 배넌이라든지 그다음에 로라 루머 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원칙을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든 창이 지금 다시 들어와서 선동질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혹시 입국금지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지난번에 국내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는, 따라서 경찰에서 그것을 조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좀 더 들여다보고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준형 위원 전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크리스틴 안 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김준형 위원 저분이 위민 크로스 디엠지(Women Cross DMZ)라고 평화운동 하시고 인권운동 하시는 분인데 입국이 거부됐었습니다, 윤석열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두 번 다요. 저런 분도 인권……

그리고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는 세계 위구르 회장도, 중국을 자극할까 봐 위구르 인권운동가도 거부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비하면 고든 창은 정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반드시 입국금지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냥 바로 추진하십시오. 이분 다시 입국시키지 않아야,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미국한테 보내는 주권국가로서의 우리의 정확한 의사 전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워싱턴 포스트 장관님 인터뷰 중에 대중국이라든지 현대화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만 저는 마지막에 한 부분이 마음에 좀 걸렸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를 질문을 했어요. 그 팔레스타인은 어떤 면에서 전 세계에서, 이런 데서 한국의 국격과 국위와 국력이…… 그런 문제도 우리한테 입장을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유엔 대사까지 지내셨기 때문에 저는 워싱턴 포스트가 장관님한테 질문했다고 하는데 질문 자체에 대한 대답이 전혀 외교적이지 않으시고 ‘우리가 너무 바빠서 거기에 신경 쓰지 못할 정도다’라고 얘기한 게 혹시 잘못 쓴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제가 그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김준형 위원 그러면 진의십니까? 앞으로도 그게 본뜻이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러니까 상황을 더 봐야 되겠지만 제가 그렇게 답을 한 데에는 평소 가자에 대한, 팔레스타인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여러 나라 중에는 정말 가자의 그 불쌍한 인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안정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준형 위원 그런데 다른 국가가 위선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진실을 얘기 안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숙고해 주시고 다음 질문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진전된 변화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외교부장관님, 지금 동맹 현대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세 가지 목표를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번 동맹 현대화를 하고 나서도 북한에 대한 우리 한미동맹의 대북 억지력이 약화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목표는 이게 끝나고 나면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하게 발전한다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느껴야 되고 한미에 있는 국민들도 그렇게 느껴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목표고.

세 번째 목표는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과도한 부담을 저서는 안 되겠다 하는데, 이제까지 트랙 레코드가 우리가 진보정부가 하고 보수정부가 들어왔을 때 보통 진보정부가 훨씬 더 약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많이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현실은 아까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협의 때는 우리의 국익을 잘 지켜 주셨으면 하고 제가 꼭 당부를 드리고요 저도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얻어 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는 그것이 우리 원자력의 미래를 위해서 농축과 재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장관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우리가 지금 원자력으로 한 20% 이상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AI 시대가 되면 앞으로 더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할 텐데, 그런데 원자력발전소를 더 지으려고 그러면 일단 포화상태에 있는 사용후연료봉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국회에서 최종처분장에 대해서 입법이 돼서 앞으로 최종처분장을 만들어 갈 텐데, 그렇지만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 사용후연료봉을 전량 최종처분장에 넣을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걸 분명히 재처리를 해서 분량을 확 줄여야 최종처분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자력을 계속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 말씀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원전 수출하지 않습니까? 원전 수출하려면 안정적으로 연료를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당연히 우리가 농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축 연구까지 해서 어떤 나라든지 우리나라의 원전을 사면 우리가 믿고 확실하게 신뢰를 갖고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원자력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경험도 많으시기 때문에 꼭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얻어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외교통장관 조현 우선 동맹 현대화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것 정말 잘 정리해 주셨고 제가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을 염두에 두고 워싱턴에 가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진보정부가 대개 미국과의 교섭에서 많이 양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거슬러 올라갑시다마는 사실은 제5공화국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양보를 했는지 저희 외교관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얻어 와야 하는 것으로 원자력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 국회에서도 몇몇 분들이 자체 핵무장이라든지 잠재적 핵능력을 길러야 된다는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정말 이런 협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외통위원님들께서는 외통위에서 이러한 폴 사이클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산업 또는 환경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미국과 아주 투명하게 원자력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핵무장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것을 강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끝났습니다만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분……

두 분.

또 여기 계십니까?

그러면 두 분 3분씩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외교부장관님께 질의하려는데요.

PPT 한번 띄워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께서 취임하시기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장관님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실용외교, 당연히 실용외교를 한다니까 저는 찬성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실용외교를 한 것이 아니라 이번 공관장 조기 귀국 조치한 것은 당파외교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4강 대사가 한꺼번에 정권 교체기에 전부 다 공식으로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게 되었거든요. 특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잘 아시잖아요. 북한이 거기다가 파병까지 해 놓고 있고요. 그런데 도대체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나라 대사를 후임자도 없이 그냥 공백으로, 대사를 공식으로 놓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일본대사는 또 공식으로 있다. 한미 정상회담, 특히 나라의 존망이 걸려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현안을 가지고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주미대사는 공식으로 있다, 후임자는 정하지도 않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매우 잘못된 외교다.

특임공관장들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들어올 수 있지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주미대사가 전문외교관 출신, 주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유엔대표부 황준국 대사도 다 소환했더라고요. 이분들 다 전문외교관 출신들이잖아요. 이런 분들 다 소환해 놓고 후임자는 정하지도 않고……

아그레망이 진행되고 있나요, 4강 대사 중에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일부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래 가지고 몇 달째 외교 공백을 두는 게 이게 무슨 실용외교냐 당파외교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루빨리, 지금 정권 바뀌었으니까 그에 맞는 사람을 보내겠다는데 그거야 뭐라 어떡하겠습니까마는 공백 안 생기도록 빨리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게 꼭 해 주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한 가지만 부연설명드리면 사실은 이런 특수한 상황이 생긴 것은 작년 12월 3일 계엄 후로……

○**김기현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정권 바뀌면 다 마찬가지로. 어느 정권이든 정권 바뀌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다 특임공관장 불렀잖아요. 부르더라도 후임자를 정해 놓고 불러야지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하려는데요.

백령도에 몰려오는 쓰레기가 지금 중국산이라고 하잖아요. 언론보도도 났던데 황당하더라고요. 표지에 보면 중국 표기가 다 나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 정부가 너무 소홀하다. 강력한 외교적 항의, 주중대사를 초치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 문제를?

○**외교부장관 조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는 강하게 요구할 것 요구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그러나 또 중국이 원하는, 중국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국내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외교부장관님, 우리가 재처리하고 농축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자꾸 국제사회에서 문제로 삼을 수 있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지 않습니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해서 제 이해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정치적 선언이었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불이행이 지속됨으로써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 문제를 구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저희가 지금 농축과 재처리를 추구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건 위원** 그다음 통일부장관님, 저는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기대치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관님이 보내는 북한에 대한 선의의 메시지가 일면 긍정적이기도 하면서도 걱정되는 것은 이게 북한의 기대치를 너무 높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치를 높이다 보니까 지난 2019년에도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재개 이렇게 요구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의 제재 체제하고 맞지 않아서 우리가 그렇게 바로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를 못 채우니까 김정은과 김여정이 이렇게 조롱과 막말로 태도를 바꾸면서 결국은 기대치 관리가 문제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선의의

조치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여정이 담화를 해서 한 얘기는 ‘이거는 비본질적인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걸 가만히 보면 통일을 포기해라 또는 통일부를 폐지해라 또는 한미 군사훈련을 아예 중단해라, 한미동맹을 해체해라, 앞으로 비핵화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라, 뭐 이런 엄청난 보따리들을 지금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러다가 벌써 기대치 관리의 실패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대통령의 경축사를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분명히 끊어 뒀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포기할 수 없고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특수한 관계라고 분명히 했고 또 하나는 북한 비핵화라는, 우리는 비핵화라는 목표도 포기할 수 없다 그런 걸 분명히 해서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기대치 관리를 생각하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북한의 기대치를 조정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가 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기대치가 아니고요 지난 3년 동안의 상처가 너무 큼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남북관계가 폐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정상회담을 했던 것이 25년 전인데 25년 왔으면 그래도 한 발짝이라도 나가 있어야 하는데 완전히 지금 박정희, 전두환 시대의 이상으로 후퇴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신뢰 회복 조치를 통해서 그 3년을 건너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8·15 경축사도 작년에 했던 이른바 자유의 북진론 이것을 폐기한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3년의 그런 압박과 제재, 그렇게 해서 북을 고립과 폐쇄로 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북·러동맹과 지금 북핵능력에, 사실은 윤석열 정부 취임 때 20개 안팎이었던 핵무기가 지금 50개로 늘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평화 공존 노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고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북한의 핵능력을 중단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라늄 농축시설은 돌고 있고 원심분리기 돌고 있고 영변원자로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중단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외교부 및 통일부 등 소관 부처에 대한 현안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이재정 위원님, 김건 위원님, 홍기원 위원님, 김기웅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최혁진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 이재강 위원님, 김상욱 위원님, 인요한 위원님, 김준형 위원님, 차지호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외교부와 통일부 등 관련 기관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현 외교부장관님, 정동영 통일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위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김 건 김기웅 김기현 김상욱 김석기 김영배 김준형 윤후덕 이용선 이재강
이재정 인요한 차지호 최혁진 한정애 홍기원

○출장 위원(1인)

조정식

○청가 위원(2인)

송언석 안철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전문위원 김사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부

장관 조현

제1차관 박윤주

제2차관 김진아

기획조정실장 배종인

조정기획관 문인석

동북중앙아시아국장 강영신

유럽국장 임형태

영사안전국장 윤주석

국제경제국장 김지희

양자경제외교국장 김선영

외교전략기획국장 이성환

외교정보기획국장 박장호

한반도정책국장 백용진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장원삼

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김기환

기획협력이사 우경하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김영채

통일부

장관 정동영

차관 김남중

기획조정실장 오대석
 통일정책실장 김병대
 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정보분석국장 홍진석
 남북관계관리단
 단장 소봉석
 국립통일교육원
 원장 고영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소장 이승신
 북한인권기록센터
 센터장 김선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장 방용승
 사무차장 동승철
 자문건의국장 박학민
 위원지원국장 송순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직무대행 이주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정낙근
 경영기획본부장 이병도
 재외동포청
 청장 이상덕
 차장 변철환
 기획조정관 오진희
 재외동포정책국장 이기성
 교류협력국장 김민철
 재외동포협력센터
 센터장 김영근
 경영기획실장 이미경
 기록전시부장 이주연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유용원	송언석	국민의힘	2025. 8. 7.

○의안 회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9. 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94)

7월 10일 회부됨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6.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3)

7월 17일 회부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7.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2)

7월 18일 회부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1)

7월 28일 회부됨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2025. 7. 31.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5)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7)

이상 2건 8월 1일 회부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1)

8월 11일 회부됨

○보고서 송부

2025년도 2분기 세출예산 및 기금 이·전용 내역

(2025. 7. 11. 통일부 제출)

7월 11일 송부됨

재외동포청 2025년 2분기 세출예산 이·전용 명세서

(2025. 7. 25. 재외동포청 제출)

7월 25일 송부됨

2025년도 2분기 예산 이·전용 명세서

(2025. 7. 30. 외교부 제출)

7월 30일 송부됨

2024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 등

(2025. 7. 30. 기획재정부 제출)

7월 30일 송부됨

국제교류기금 2025년도 제2차 운용계획 변경

(2025. 8. 8. 외교부 제출)

8월 8일 송부됨

2024년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 활동 및 평가 결과 보고

(2025. 8. 13. 외교부 제출)

8월 13일 송부됨

○진정서 송부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 핵 폐수 무단 방류에 대한 조치 촉구 결의문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참고자료로 송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일	제출일
대통령령 제35653호	외무공무원임용령	2025. 7. 15.	2025. 7. 18.
외교부훈령 제246호	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2025. 7. 21.	2025. 7. 21.
외교부공고 제2025-118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 8. 23.	2025. 7. 18.
통일부훈령 제718호	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025. 7. 21.	2025. 7. 21.
재외동포청훈령 제49호	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2025. 7. 22.	2025. 8. 12.